

# 한동훈이 대한민국에 남긴 그간의 흔적

한동훈의 업적과 공적

## 목 차

### 제1장 2024년 12월 3일 밤, 편이 아닌 나라를 택하다

계엄 즉각 위헌 선언, 190표 만장일치, 유혈 사태를 막은 결단

### 제2장 6조 원을 지킨 남자

론스타·엘리엇·선들러 ISDS 3연승

### 제3장 1,400만 개미의 편에 서다

금투세 폐지

### 제4장 검사 한동훈, 대한민국을 위해 스스로 일어난 사람

진영 무관의 수사 철학, 독립운동처럼 수사한 사람

### 제5장 내 아이를 지키는 법

한국형 제시카법과 촉법소년 연령 하향

### 제6장 57년 묵은 빚장을 열다

국가배상법 개정과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

### 제7장 여의도 저승사자를 되살리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과 서민의 방패

## 제8장 “저는 다 걸겠습니다”

---

1 대 180의 투쟁, 한동훈의 국회 시절

## 제9장 당대표 취임 닷새, 피해자를 먼저 보다

---

티메프 사태와 한동훈의 신속한 조치

## 제10장 국가의 과오를 인정하다

---

인혁당 빚고문 해결과 제주 4·3 직권재심

## 제11장 약자를 위한 법,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보다

---

만델라 소년학교와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

## 제12장 나라의 구조를 고민하다

---

이민청 설립, 국제법무국 신설, 간첩죄 개정



## 제 1 장

# 2024년 12월 3일 밤, 편이 아닌 나라를 택하다

계엄 즉각 위헌 선언, 190표 만장일치, 유혈 사태를 막은 결단

---

2024년 12월 3일 밤, 한동훈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20년을 함께한 사람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사람의 편에 서면 자신은 안전했을 것입니다. 침묵하거나, 모르는 척하거나, 하룻밤만 기다리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한동훈은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택했습니다. 자기 편이 아닌 나라가 불행해지는 것을, 단 한 시간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국회로 달려갔고, 18명의 의원을 이끌고 표결장에 섰으며, 190표 만장일치 계엄 해제를 이끌어냈습니다. 은혜를 저버린 것이 아닙니다. 은혜보다 큰 것을 지킨 것입니다. 내 편이 아니라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개인의 안위가 아니라 5천만 국민의 내일을 먼저 걱정하는 사람.

이 말도 많이 들립니다. 국회 의석의 과반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었으니, 한동훈이 나서지 않았어도 계엄 해제 표결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그날 밤의 현실은 숫자와 달랐습니다.

1 숫자가 있어도 사람이 없으면 표결은 없습니다

계엄 해제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의 출석과 표결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석 숫자와 본회의장에 앉아 있는 사람 숫자는 다릅니다.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한 것은 바로 그 사람들이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국회 주변은 군인과 경찰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의원들이 국회에 도착하더라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석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 2 그날 밤, 누가 있었고 누가 없었습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 안 숲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야당의 대표가 국민 앞에 나서서 계엄에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경찰 봉쇄를 이유로 국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계엄령 가능성을 여러 차례 제기하며 경고했던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지역구가 영등포, 국회와 가장 가까운 곳인데도 국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평소의 말이 아니라 그 순간의 행동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 3 한동훈은 무엇을 했습니까

한동훈 대표는 계엄 소식을 접하자마자 움직였습니다.

첫째, 즉각 "불법적 비상계엄, 국민과 함께 막겠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여당 대표가 자기 당 소속 대통령의 계엄에 정면으로 반대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실시간으로 전국에 퍼졌습니다. 국민들은 힘을 얻었고, 계엄 세력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여당마저 등을 돌렸다는 사실이 계엄의 정당성을 뿌리째 흔든 것입니다.

둘째, 군인들에게 불법 계엄에 동참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계속 냈습니다. 이것은 계엄군의 사기와 결속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는 행동이었습니다. 현장의 군인들 입장에서 여당 대표까지 불법이라고 하는 계엄에 목숨을 걸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셋째,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고 의원들과 함께 경찰 저지선을 뚫고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했습니다. 이 장면은 전국에 실시간으로 방송됐습니다. 여당 대표가 자기 당 대통령의 계엄에 맞서 경찰 저지를 뚫고 국회로 들어가는 모습. 그 장면이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망설이던 의원들이 국회로 향했고, 국민들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 4 축구로 비유하겠습니다

우리 팀에 선수가 열한 명 있으니 누가 빠져도 경기는 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반전 마지막 5분, 1 대 0으로 지고 있을 때 동점골을 넣은 선수에게 "너 없어도 다른 선수가 넣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정적 순간에 결정적 행동을 한 사람의 가치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한동훈이 한 일은 그냥 한 표를 보탠 것이 아닙니다. 여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고 헌법 편에 섰다는 사실, 그것이 계엄 해제의 결정적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이 과반이었기 때문에 계엄이 해제된 것이 아닙니다. 여야가 함께 나섰기 때문에 계엄이 해제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함께"를 만든 사람이 한동훈이었습니다.

### 5 한동훈이 나서지 않았다면

만약 한동훈이 침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당이 대통령 편에 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계엄은 여당 대 야당의 싸움이 됐을 것입니다. 군과 경찰은 대통령과 여당의 지시를 따랐을 것입니다. 국회 봉쇄는 더 강경해졌을 것이고, 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은 훨씬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계엄 해제가 지연될수록 유혈 충돌의 가능성은 높아졌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계엄을 막은 것은 의석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헌법을 지키겠다는 의지, 위협을 무릅쓰고 국회로 달려간 행동, 자기 편이 아닌 나라 편에 선 결단. 그것이 계엄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의 첫 번째 신호를 보낸 사람이 한동훈이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만으로도 계엄 해제 표결이 가능했으니 결과는 같지 않았겠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그날 밤 윤석열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1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는데도 버텼습니다

2024년 12월 4일 새벽 1시 1분.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재석 의원 190명 중 찬성 190명,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군의 봉쇄를 뚫고 본회의장에 진입해 표결에 참여한 결과였습니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분명합니다. 국회가 과반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즉시 계엄을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그는 용산 국방부 청사 지하 벙커, 이른바 결심실을 방문하여 군 수뇌부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여야가 하나로 뭉친 만장일치 의결 앞에서도 3시간 넘게 버틴 것입니다. 국회 표결로부터 3시간 26분이 지난 새벽 4시 27분에야 담화를 통해 해제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그 3시간 반 동안 군 병력의 철수는 지연됐고, 전국은 긴장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2 민주당 단독 의결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야 만장일치 앞에서도 3시간 반을 버틴 사람입니다.

만약 여당 의원들이 빠지고 민주당 의원들만으로 계엄 해제안이 통과됐다면, 윤석열에게는 버틸 명분이 생깁니다.

"반국가 세력에 장악된 야당의 정치적 책동이다. 여당은 동의하지 않았다. 국회의 진정한 합의가 아니다."

이런 논리를 내세워 계엄 해제를 거부하거나 훨씬 더 오래 지연시켰을 가능성이 큼니다. 단순히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 군을 계속 동원하며 야당 의원들에 대한 체포 작전을 강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야 만장일치 앞에서도 새벽 4시 27분까지 결심실에 틀어박혀 있던 사람이, 야당 단독 의결 앞에서 순순히 물러났을 리가 없습니다.

3 시간은 계엄 세력의 편이었습니다

계엄이 길어질수록 유리한 쪽은 계엄을 선포한 쪽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군 병력이 추가 배치되고, 통신 통제가 강화되고, 핵심 인사들에 대한 체포가 진행됩니다. 윤석열이 새벽 1시 1분 표결 이후에도 3시간 반이나 시간을 끈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야당 단독 의결이었다면 그 3시간 반은 6시간이 됐을 수도 있고, 12시간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계엄이 다음 날 아침까지 이어졌다면 국회 앞과 대통령실 앞에서 대규모 충돌이 벌어졌을 것이고,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을 것입니다.

#### 4 190이라는 숫자의 의미

민주당 단독 의결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됩니다. 하지만 그 날 밤에 필요했던 것은 법적 유효성만이 아니었습니다.

군인들이 총을 내려놓게 만드는 힘. 결심실에 틀어박힌 윤석열이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만드는 힘. 국민에게 "이것은 끝났다"는 확신을 주는 힘.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190명 만장일치. 여당과 야당의 구분 없이 대한민국 국회 전체가 한목소리로 "이 계엄은 위헌"이라고 선언한 것. 그 무게는 군 수뇌부조차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만든 실질적인 정치적 종결이었습니다. 여당마저 등을 돌린, 명분 없는 계엄. 그 인식이 군과 국민 모두에게 확실히 심어진 것입니다.

야당 단독 의결로도 계엄은 해제됐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과만 보고 과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날 새벽은 1분 1초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시간이었습니다. 한동훈이 만들어낸 여야 만장일치는 계엄을 가장 빠르게, 가장 확실하게, 가장 안전하게 끝낸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새벽 4시 27분이라는, 그나마 가장 이른 시간에 끝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 6조 원을 지킨 남자

론스타·엘리엇·선들러 ISDS 3연승

---

6조 원을 지킨 남자 모두가 지라고 했던 싸움에서 세 번 이긴 한동훈

제1장 론스타 수사 — 서른셋 검사의 밤

2006년 어느 늦은 밤, 서초동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7층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유리창에 어른거렸지만, 사무실 안의 서른셋 젊은 검사는 그것을 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수만 쪽에 달하는 서류 멍치가 쌓여 있었고, 식은 믹스커피 종이컵이 휴지통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동훈 검사는 밤새 형광펜을 들고 숫자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파고든 사건은 론스타(Lone Star)였습니다.

미국 텍사스에 본부를 둔 이 거대 사모펀드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 3,834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외환위기의 상흔이 채 아물지 않은 시절, 정부는 부실화된 외환은행을 급히 매각해야 했고, 론스타는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과 외환카드를 합병하면서 합병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감자(減資)' 설을 시장에 퍼뜨렸습니다. 감자를 하면 주가가 떨어집니다.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 외환카드 주식을 팔아치웠고,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론스타는 그렇게 떨어진 주가를 기반으로 외환카드를 헐값에 합병했습니다.

모두가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쉽게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론스타 측에는 세계 최고의 법률 자문단이 있었고, 그들의 논리는 철옹성처럼 보였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넘어온 자료에는 의심 정황만 있을 뿐,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는 없었습니다.

한동훈 검사는 현대차그룹 수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소속청 복귀를 준비하던 참이었습니다. 상부는 그에게 또 하나의 과제를 맡겼습니다. 그는 동료 검사와 함께 론스타 사건에 투입되었습니다.

처음 기록을 받아들였을 때, 그는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심증은 있었지만 물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동훈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닷새를 검찰청사에서 잤습니다. 신문지를 덮고 소파에서 눈을 붙이다 새벽에 일어나 다시 기록을 뒤졌습니다. 누구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고행이었습니다.

그의 승부수는 론스타의 자문사였던 외국계 투자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이었습니다. 외국계 금융기관에 대한 강제 수사는 당시로서 금기였습니다. 외교적 마찰을 우려한 상부에서는 신중론이 나왔고, "괜히 건드렸다가 국제적 망신만 당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한동훈은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 압수된 수만 건의 이메일 속에서 마침내 결정적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론스타 측이 감자 계획을 발표하던 바로 그 시점, 실무자들 사이에서 오간 이메일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감자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 겉으로는 감자를 검토한다고 시장에 공포감을 조성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이미 감자 계획을 폐기한 상태였습니다. 의도적인 허위 정보 유포. 주가조작이었습니다.

한동훈은 그 순간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대한민국을 우습게 아는 그들의 오만에 대해 정의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 증거를 바탕으로 외국인 임원들을 소환하고, 논리적인 추궁 끝에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법원은 론스타 코리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네 번이나 기각했습니다. 사법부와 검찰 사이의 보이지 않는 긴장,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외압의 기미. 그 속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10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한동훈은 부산지검으로 좌천성 발령을 받아 내려가서도 일주일에 두 번씩 서울로 올라와 공판에 참석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에게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2011년, 대법원은 마침내 론스타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표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한 범죄자를 처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론스타가 범죄를 저지른 부도덕한 자본임을 대한민국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한동훈이 밝혀내고 얻어낸 유죄 판결 하나가, 20년 뒤 대한민국을 6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소송에서 구해낼 유일한 무기가 될 줄은 말입니다.

## 제2장 론스타 ISDS — 6조 원의 국익을 지킨 승부수

2012년 11월, 론스타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46억 7,950만 달러. 당시 환율로 약 6조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대 규모의 국제 소송이었습니다.

그 규모를 실감하기 어렵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6조 원이면 전국의 모든 초등학생에게 10년간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돈입니다. 수도권에 지하철 2호선 전체를 새로 건설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론스타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우리는 외환은행을 매각하려 했는데, 한국 정부가 여론의 눈치를 보며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지연시켰다. 그 바람에 막대한 손해를 봤다." 겉으로 보면 그럴듯한 주장이었습니다. 헐값에 사들인 은행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매각 승인이 늦어졌다며 또다시 수조 원을 뜯어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관료들은 당황했습니다. "적당히 합의해서 금액을 줄이자"는 패배주의가 관가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의 판도를 바꿀 열쇠가 이미 있었습니다. 2011년, 젊은 한동훈 검사가 받은 그 형사 유죄 판결이었습니다.

국제법에는 '깨끗한 손의 원칙(Clean Hands Doctrine)'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손이 더러운 자는 법의 보호를 청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론스타는 주가조작이라는 범죄를 저질렀고, 대한민국 대법원이 그것을 유죄로 확정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지연한 것은 부당한 방해가 아니라 범죄 수사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20년 전 한동훈이 찾아낸 이메일 한 줄이, 6조 원이라는 혈세를 지키는 방어 논리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한동훈은 검사 시절 내내 이 사건의 기록을 인생의 짐처럼 들고 다녔습니다. 이사할 때마다 트럭 한 대 분량의 복사본을 챙겼습니다. 당시 소송을 잘 아는 공무원들은 대부분 퇴직했고, 현직에 남아 이 사건의 처음과 끝을 꿰뚫고 있는 실무자는 그가 거의 유일했습니다.

2022년 8월, 1차 중재 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의 청구액 6조 원 중 대부분을 기각했지만, 약 2억 1,650만 달러(약 2,800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습니다. 다수 의견은 론스타의 주가조작을 인정하면서도 한국 정부의 승인 지연 책임을 일부 인정했고, 소수 의견은 "론스타의 주가조작이 있었으므로 배상 책임은 0원"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 소수 의견은 한동훈이 설계하고 입증했던 주가조작 유죄가 국제 무대에서도 통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 시기, 한동훈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론스타가 아니라 자국의 정치인들이었습니다. 야당 의원은 "한동훈을 내세워 승산 낮은 불복 절차로 희망 고문한다면 대역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방송인은 "이자가 쌓이는데 한동훈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은 론스타 주가조작 수사 자체가 부실했다고 공격했습니다. "승산 없는 싸움으로 희망 고문을 한다." "패소하면 한동훈이 사비로 물어내라." 저주 섞인 공격이 사방에서 쏟아졌습니다.

돌이켜 보면 이들의 행태는 적군이 아닌 아군 진영에서 날아온 총탄이었습니다. 론스타라는 거대한 투기 자본과 싸우는 법무부 장관의 뒤통수를 향해, 같은 나라의 정치인들이 방어 쇠를 당긴 것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승소 확률이 100%가 아니라도, 정부가 밤을 새워서라도 100%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주가조작을 한 범죄자가 피 같은 나랏 돈을 가져가는 걸 어떻게 눈 감겠습니까."

ICSID 중재 판정이 뒤집힐 확률은 통계적으로 10% 미만이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조차 "최소 인용은 극히 희박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현실적으로 2,800억 원을 주고 끝내는 것이 안전한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확률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내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거 잘못되면 제가 책임 지겠습니다. 하지만 '안 한다'는 얘기는 하지 마시다." 실무진에게도 단호했습니다. "저를 지키려 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지키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실패했을 때 책임을 지는 일입니다. 한동훈은 그 두려움을 자신이 끌어안았습니다.

소송 대리인단 교체 요구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정부를 대리하던 법률사무소는 과거 론스타를 상대로 승소한 경험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실무진과 대리인단을 지켜냈습니다.

2023년 8월, 법무부에 국제법무국을 신설했습니다. 그때까지 국제 소송 대응은 작은 규모의 조직에서 담당하고 있었고, 담당 인력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한동훈은 이것을 국(局) 단위로 격상시키고 전문 인력을 대폭 늘렸습니다. 산하에 국제법무정책과, 국제법무지원과, 국제투자분쟁과 등 3개 과를 두고 25명의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한동훈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ISDS에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국내에서 대응할 역량이 부족해 외국 법률사무소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경험을 쌓으면 우리도 충분히 대응하면서 국익을 지키고 비용도 아낄 수 있습니다." 이 국제법무국은 론스타뿐만 아니라 이후 벌어지는 모든 국제 분쟁에서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핵심 기지가 되었습니다.

그해 8월,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피 같은 세금입니다.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법무부는 판정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승산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고 했습니다. 그는 바위를 깰 수 있는 망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20년간 품어온 확신이었습니다.

2025년 11월 18일, 마침내 최종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ICSID 취소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배상해야 한다는 원 판정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배상금 0원. 론스타가 처음 요구했던 약 6조 원은 1차 판정에서 2,800억 원으로 줄었고, 한동훈이 주도한 취소 신청 끝에 단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완전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이 쓴 소송비용 중 약 72억 원까지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국제 중재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역전극이었습니다.

결과가 발표되자, 이재명 정부의 국무총리는 브리핑에서 "새 정부의 쾌거"라고 했습니다. 한동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90분 내내 선수들을 욕하다가 경기에서 이기자 그라운드에 난입해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듯한 기이한 광경입니다." 그동안 항소를 반대하고 한동훈을 공격했던 이들은 침묵하거나 태도를 바꿨습니다. "대역죄인" 발언은 어디론가 사라졌고, "이자 책임론"은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정치적으로 대척점에 서 있었던 현 법무장관의 반응입니다. 그는 한동훈의 이 결단에 대해 "잘하신 일이고 소신 있는 결정으로 평가받을 결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영 논리를 떠나 국익을 위한 결단이 옳았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한동훈은 담담하게 소회를 밝혔습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돈은 저의 돈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돈이기 때문입니다."

### 제3장 엘리엇 ISDS – 바늘구멍을 뚫다

론스타와의 싸움이 마무리되기 전, 한동훈의 책상 위에는 또 하나의 국제 소송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국의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Elliott Management)가 대한민국 정부를 겨냥한 것입니다.

2015년, 국내 최대 전자기업 그룹은 계열사 간 합병을 추진했습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었는데, 합병 비율이 한쪽 주주에게 불리하게 설정되었다는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해당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엘리엇은 합병에 반대했으나,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합병안은 통과되었습니다.

합병 이후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면서 상황이 뒤집혔습니다. 당시 정부가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을 압박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엘리엇은 이를 근거로 2018년 7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약 1조 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습니다.

5년간의 공방 끝에 2023년 6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배상 원금 약 600억 원에 이자를 포함해 약 1,60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PCA는 국민연금공단이 한국법상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국가기관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한동훈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가기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행위를 정부의 행위로 간주한 판정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판정이 나온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2023년 7월, 그는 직접 브리핑에 나서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ISDS 취소소송의 인용률은 최근 2년 기준 약 3%에 불과했습니다. 97%의 확률로 질 수 있는 소송에 국가의 이름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구도의 공격이 쏟아졌습니다. "취소소송을 제기한 한동훈에게 배임죄까지 물어야 한다." "이자를 대신 물 것이냐." 론스타 때와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한동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취소소송은 영국 법원에서 세 단계를 거쳤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패했습니다. 2024년 8월, 영국 고등법원 1심은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항소했습니다. 2025년 7월, 영국 항소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1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23일, 환송심에서 영국 고등법원은 최종적으로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영국 법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정부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점, 공적연금기금의 운용이 국방이나 치안 같은 국가의 핵심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점, 국민연금공단의 일상적 결정이 정부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한동훈이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핵심 쟁점으로 삼았던 바로 그 논리가, 2년 7개월 만에 그대로 관철된 것입니다.

승소 소식이 전해지자 한동훈은 곧바로 입장을 냈습니다. "론스타에 이어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취소소송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이 이겼습니다. 피 같은 세금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준 공직자들과 관계자들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엘리엇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영국 법원이 중재판정을 환송함에 따라 후속 중재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같은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또 다른 헤지펀드 메이슨의 사건에서는 약 860억 원의 배상이 확정된 바 있어, 후속 중재에서의 추가 공방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핵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동훈이 3%의 확률에 도전하여 약 1,600억 원의 배상 판정을 뒤집는 데 성공했다는 사실입니다.

#### 제4장 쉐들러 ISDS — 설계자의 승리

론스타와 엘리엇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또 하나의 국제 소송이 대한민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에 본부를 둔 세계적 엘리베이터 회사 쉐들러(Schindler)가 2018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을 제기한 것입니다. 청구 금액은 약 3,200억 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한동훈의 역할은 론스타나 엘리엇 때와는 성격이 달랐습니다. 론스타에서는 검사로서 직접 수사하여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고, 엘리엇에서는 장관으로서 비판을 무릅쓰고 취소소송을 결단했습니다. 쉐들러에서는 직접 수사에 관여하거나 특정 소송 결단을 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한 일은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터를 닦고 설계도를 그린 것이었습니다.

한동훈이 2023년 8월 신설한 국제법무국이 바로 그 설계도였습니다.

국제법무국은 산하에 세 개의 과를 두었습니다. 국제법무정책과는 조약 체결과 국제 협상 관련 법률 자문을, 국제법무지원과는 국제분쟁 예방과 법적 검토를, 국제투자분쟁과는 ISDS 대응과 실무 운영을 맡았습니다. 기존에는 2개 과의 소규모 인력이 담당하던 업무를 1국 3과, 25명 규모로 확대한 것입니다.

이 조직이 있었기에 국제중재 전문가를 정부 안으로 영입할 수 있었습니다. 초대 국제법무국장으로 임명된 인물은 미국 현지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고, 국제중재 기관의 조정위원과 중재인을 맡은 경력을 가진 전문가였습니다. 이 국장이 론스타 취소 소송의 실무를 이끈 데 이어, 쉐들러 사건에서도 법무부 측 대응을 총괄했습니다.

신들러 사건에서 정부를 대리한 법률사무소의 대응팀장은 "이번 분쟁은 국제중재와 금융, 공정거래 규제라는 세 가지 복합적 쟁점이 얽힌 어려운 사건이었다"며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한 팀으로 결합해 정부 규제의 국제법적 정당성을 논리적이고 일관되게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법무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외부 법률사무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을 조율한 것입니다.

2025년 3월 14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신들러의 청구를 전액 기각했습니다. 3,200억 원 전액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한동훈은 이 소식에 대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법무부장관으로서 최우선 순위로 어렵게 신설한 국제법무국 소속 공직자들과 관계자들의 실력과 애국심 덕분입니다." 자신의 역할을 제도를 만든 설계자로 규정하고, 실무진의 공을 전면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론스타 소송, 엘리엇 소송에서는 야당 정치인들과 시민단체 인사들이 '네 돈 낼 거 아니면 소송하지 말라'며 강력하게 방해했지만, 신들러 소송에서는 그 정도로 방해하지는 않았습니다." 론스타와 엘리엇에서 연속으로 이기면서, "승산 없는 소송"이라는 비판 자체가 나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마무리 — 세 번의 승리가 남긴 것

2003년 론스타 수사에 투입된 서른셋 젊은 검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사건의 기록을 트럭 한 대 분량씩 이삿짐에 챙기며 다녔습니다. 좌천을 당해서도 서울로 올라와 공판에 참석했고, 장관이 되어서는 97%의 패소 확률에 맞서 국가의 이름으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사방에서 비난이 쏟아져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관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자신이 만들어놓은 조직이 세 번째 승리까지 이끌어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론스타에서는 약 4,000억 원 규모의 배상 책임에서 벗어났습니다. 엘리엇에서는 약 1,600억 원의 배상 판정을 뒤집었습니다. 신들러에서는 3,200억 원 청구를 전액 기각시켰습니다. 인용률 3%의 바늘구멍을 두 번 뚫고, 세 번째 싸움에서도 완승한 것입니다.

한동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패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공적 결정에 사심이 끼어들지 않았다면,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감수할 수 있습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얻은 것이 있다면 잃는 것도 감수해야 합니다."

"불안과 공포를 느끼지 않는 것이 용기가 아닙니다. 느끼면서도 행동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전문성과 용기가 어떻게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모두가 포기하자고 할 때 "아니오"라고 말하며 끝까지 싸운 사람. 그의 20년은 대한민국에 이런 교훈을 남겼습니다.

정의는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용기 있는 결단과 치열한 노력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 1,400만 개미의 편에 서다

금투세 폐지

---

1400만 개미의 편에 서다 — 한동훈과 금투세 폐지

## 1 금투세란 무엇이었나

금융투자소득세. 줄여서 금투세.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벌어들인 소득이 연간 5000만 원을 넘으면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 2020년 12월 문재인 정부 시절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처음에는 2023년 시행 예정이었고, 이후 2025년 1월로 미뤄진 상태였습니다.

얼핏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2022년부터 증권거래세가 단계적으로 인하되고 있었습니다. 즉 금투세를 걷는 대신 거래세를 낮춰주겠다는 교환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금투세 시행이 계속 미뤄지면서, 거래세는 낮아졌는데 금투세는 걷지 않는 '세수 공백'이 생겼습니다. 반대로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면, 이미 낮아진 거래세에 더해 투자 소득에까지 세금이 이중으로 물리는 셈이 되어 투자자 이탈이 우려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개인투자자들이 두려워한 것은 시장 위축이었습니다. 한국 증시에서 수익을 내면 세금을 물리고, 해외 증시에 투자하면 기존 양도세 체계 그대로인 상황에서, 국내 주식시장의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1400만 개미투자자들의 공통된 걱정이었습니다.

## 2 총선 공약에서 당대표 어젠다로

2024년 1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은 증권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발맞춰 금투세 폐지를 22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 공약의 전면예 선 사람이 한동훈이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총선을 지휘하던 한동훈은 금투세 폐지를 핵심 민생 공약의 하나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국민의힘이 108석으로 다시금 패배하면서 금투세 폐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175석의 거대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안 통과가 불가능한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한동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7월 23일 국민의힘 당대표로 당선된 뒤, 첫 최고위원회의에서부터 "금투세 폐지 등 민생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실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 3 한동훈의 전략 — 여론전과 현장 압박

108석의 소수 야당 대표가 175석의 거대 여당(민주당)의 당론을 바꾸려면, 국회 안이 아니라 국회 밖에서 싸워야 합니다. 한동훈의 전략은 투자자 여론을 결집시켜 민주당을 포위하는 것이었습니다.

8월 27일, 한동훈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았습니다. 당대표 취임 후 첫 현장 간담회 장소로 증권가를 택한 것입니다. 거래소 이사장, 업계 종사자들과 만나 금투세 폐지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금투세 폐지를 넘어 기업 상속세 문제, 배당소득 분리과세까지 언급하며 전선을 넓혔습니다.

"주거격차, 자산격차, 돌봄격차, 교육격차를 줄이자. 자본시장의 밸류업 정책으로 자산형성의 사다리를 더 많이, 더 편하게 만들어야 한다. 금투세 폐지에 국민의힘이 집중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

금투세를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자산 격차 해소'와 '청년 자산형성'의 문제로 프레임한 것입니다.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주식으로 자산을 모아가는 청년과 중산층을 지키는 것이라는 논리였습니다.

9월 1일, 한동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첫 여야 대표 회담에서도 금투세를 핵심 의제로 올렸습니다. 회담장 밖 국회 정문 앞에서는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소속 개미투자자들이 민주당에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10월 4일에는 국회 정문 앞 투자자 집회에 직접 참석해 "민주당이 어차피 입장을 바꿀 텐데, 유예와 폐지는 완전히 다르다. 바꾸는 김에 1400만 투자자가 진짜 원하는 폐지를 선택해 달라"고 압박했습니다.

'유예'가 아니라 '폐지'를 요구한 것이 한동훈의 핵심이었습니다. 2년 뒤에 다시 시행한다는 유예는 불확실성을 남깁니다. 투자자들은 2년 뒤에 또 같은 논쟁이 반복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폐지'만을 말했습니다.

#### 4 민주당, 당론을 뒤집다

민주당 내부는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한 지도부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론, 금투세를 폐지하면 상위 1%만 혜택을 본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1400만 개미투자자의 반발은 거셌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의 SNS 계정에는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민주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항의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결정적 변수는 이재명 대표 자신이었습니다. 개인투자자의 반발이 커지자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 신중론을 펴는 등 입장을 바꾸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강행 당론을 재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24년 11월 4일,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동훈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늦었지만, 늦었지만 금투세의 완전한 폐지에 동참하기로 한 것을 환영합니다. 결국 이런 민생에는 여야 진영이 없습니다."

'늦었지만'을 두 번 반복한 것이 눈에 띕니다. 자신이 몇 달간 압박해온 결과라는 것을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짚은 것입니다.

#### 5 마지막 고비 — 계엄 정국 속의 표결

민주당이 폐지에 동의한 뒤에도 법안 통과까지는 험난한 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2024년 12월 초, 여야는 예산안을 둘러싸고 극한 대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금투세 폐지안이 뒷전으로 밀리면서 개미투자자들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대한민국 역적"이라는 항의 문자까지 보냈습니다.

12월 3일에는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터졌습니다. 정치권이 혼란에 빠진 와중에도 금투세 폐지는 2025년 1월 1일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졌습니다.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찬성 204명. 압도적인 숫자입니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찬성표를 던진 것입니다. 불과 석 달 전까지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민주당의 당론이 완전히 뒤집힌 결과였습니다.

#### 6 한 사람이 바꾼 것

금투세 폐지의 공은 한동훈 한 사람에게만 돌릴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를 선언했고, 이복현 금감원장이 "시행 강행은 비겁한 결정"이라며 동조했고, 1400만 개미투자자가 거리로 나왔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흐름의 가운데서 일관되게 '폐지'라는 한 단어만을 말하고, 여론을 조직하고, 현장을 찾고, 야당을 압박하고, 회담 테이블에 의제를 올린 사람은 한동훈이었습니다.

비대위원장 시절 총선 공약으로 씨앗을 뿌렸고, 총선에 졌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당대표가 되자마자 첫 의제로 올렸고, 한국거래소 현장 간담회로 전선을 열었고, 여야 대표 회담에서 정면으로 요구했고, 투자자 집회에 직접 나가 함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08석으로 175석의 당론을 바꾸는 것은 숫자의 논리로는 불가능합니다. 한동훈은 숫자 대신 여론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1400만 투자자의 목소리가 국회 안의 의석수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결국 이런 민생에는 여야 진영이 없습니다."

한동훈이 금투세 폐지 직후 한 말입니다. 이 한 문장이 이 싸움의 본질을 요약합니다. 금투세 폐지는 여당의 승리도, 야당의 패배도 아니었습니다. 진영의 벽을 넘어 1400만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문제를 해결한 것이었습니다. 한동훈은 그 벽을 넘는 데 필요한 망치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 검사 한동훈, 대한민국을 위해 스스로 일어난 사람

진영 무관의 수사 철학, 독립운동처럼 수사한 사람

---

윤석열이 한동훈을 출세시켰다. 업어 키웠다 라는 말에 대하여

한동훈을 업어서 키워줬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한동훈을 시기 모함하는 측에서 흘러나온 이야기입니다. 오래된 이야기이고, 반복된 이야기이며, 그래서 사실처럼 굳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기록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2003년, 서울지검 형사9부. 검사 임관 2년 차인 한동훈은 재계 서열 3위 그룹의 분식회계 사건 압수수색 현장에 있었습니다. 수사팀이 가장 필요로 했던 핵심 문건, 이른바 '보고문건'을 확보한 사람이 바로 그였습니다. 그룹 총수가 구속되었습니다. 한동훈은 그때 겨우 서른 살이었습니다.

이 수사를 지휘한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짚어야 합니다. 당시 형사9부 부장은 이인규 검사였습니다. 훗날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기업범죄 수사의 실력자였습니다. 한동훈은 이인규 부장 밑에서 첫 대형 사건의 돌파구를 열었습니다. 윤석열은 이 사건이 대검 중수부로 확대된 뒤에야 광주지검에서 파견되어 합류한 여러 검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한동훈을 발탁하고 키운 것은 윤석열이 아니라 이인규였고, 그 이인규조차도 자신의 회고록에서 한동훈의 능력을 "논리적이며 사안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탁월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진 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04년, 대검 중앙수사부. 여당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사건. 이 수사의 지휘부는 안대희 중수부장과 문효남 수사기획관이 이끌었고, 이인규가 수사팀에 합류했습니다. 윤석열도 당시 파견 검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한동훈도 파견 검사였습니다. 둘은 같은 수사팀의 팀원이었을 뿐, 상사와 부하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정치권 100억 원대 비자금 유입 진술을 확보한 수사 검사 중 한 명이 한동훈이었다는 사실은 최근에야 확인되었습니다.

2006년, 다시 대검 중수부. 한동훈은 미국 컬럼비아 대학 로스쿨 유학을 마치고 복귀한 뒤, 검찰연구원 자격으로 국내 굴지 자동차그룹의 비자금 사건 수사를 맡았습니다. 1,380억 원대 비자금이 드러났고 그룹 총수가 구속되었습니다. 같은 해,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사건. 론스타 관련 수사에서 유일하게 유죄 판결을 받아낸 것이 한동훈의 수사였습니다. 이 판결은 훗날 대한민국이 론스타 ISDS에서 6조 원의 국익을 지키는 방어 논거가 됩니다. 이 수사들에서 한동훈의 직속 상관은 당시 중수부장이었지, 윤석열이 아니었습니다. 윤석열은 그 무렵 전혀 다른 보직에 있었습니다.

2007년, 부산지검 특수부. 현직 국세청장 뇌물수수 사건. 대한민국 검찰 역사상 재임 중인 세정 최고 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대검 수뇌부는 불구속을 종용했습니다. 한동훈은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가 검찰총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직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영장이 청구되었고, 국세청장은 구속되었습니다. 이 수사는 윤석열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지휘 계통도, 소속 부서도, 수사 대상도 전부 다릅니다. 오로지 한동훈 자신의 판단과 배짱으로 이루어낸 일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동훈이 검사로서 이름을 알린 대형 사건들 가운데, 윤석열이 직속 상사로서 지휘한 사건은 2016년 특검 이전에는 없습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한동훈의 수사 경력을 만들어준 사람들은 이인규, 안대희, 그리고 각 부서의 지휘관들이었습니다. 윤석열은 같은 수사팀에서 함께 일한 선배 검사였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업어서 키워줬다"는 말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월간중앙의 밀착 취재 기사가 이 점을 분명히 짚었습니다. 2003년 당시 한동훈은 검사 '2학년'인 새내기였고, 두 사람의 인연을 그 시절까지 거슬러 올려 연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법조계 인사들은 증언합니다.

2016년 특검에서 윤석열은 수사팀장이었고, 한동훈은 재벌 총수 수사를 전담했습니다.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을 때, 직접 2차 영장심문에 나서 구속을 이끌어낸 사람은 한동훈이었습니다. 역대 최고 성과를 낸 특검이라는 평가의 중심에 한동훈의 수사가 있었습니다. 그 뒤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되고, 한동훈이 3차장검사로 배치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전직 대통령 구속 수사,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등 핵심 실무를 이끈 것은 한동훈이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오히려 반대입니다. 윤석열은 한동훈을 비롯한 유능한 후배 검사들의 수사 능력에 힘입어 '검찰의 별'이라는 인정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기록에 더 부합합니다. 수사팀장이 빛나려면 수사 검사가 결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동훈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검사였습니다.

오히려 기록은 반대 방향을 가리킵니다.

2012년, 윤석열은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한 뒤 박근혜 정부와 정면충돌했습니다. 지방 한직으로 좌천되었습니다. 검찰 안에서 윤석열은 기피인물 취급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동훈은 윤석열 곁에 남은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윤석열이 주말에 서울로 올라오면, 두 사람은 반바지 차림으로 남산을 걸었습니다. 사적으로 겹치는 취미가 적어 대화 소재도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말없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 옆에, 있어주었습니다. 객관적인 기록으로만 보면 검찰기간 중 한동훈이 윤석열을 오히려 더 많이 도왔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업어서 키워줬다"는 말의 이면에는 소유의 논리가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준 사람이니 대한민국의 운명과 상관없이 내 뜻을 따라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것은 선배와 후배 사이의 우정이 아닙니다. 주인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입니다. 한동훈은 그 관계를 거부한 것이고, 그 거부가 2024년 12월 3일 밤에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켰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윤석열은 대선 후보 시절 한동훈을 두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수사를 독립운동처럼 해온 사람"이라고. 이 말은 무엇을 인정한 것입니까. 한동훈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신념으로,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며 수사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독립운동은 누군가 업어서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나서는 것입니다.

검사 한동훈의 경력을 연대순으로 놓고 보면, 윤석열은 그 긴 행로의 동반자 중 한 사람이었을 뿐, 그 행로 자체를 만든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와 3위 그룹의 총수를 모두 구속시킨 검사는 검찰 역사에서 한동훈뿐입니다. 현직 국세청장을 직을 걸고 구속시킨 검사도 한동훈뿐입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업어서 만들어줄 수 있는 경력이 아닙니다.

## 내 아이를 지키는 법

한국형 제시카법과 촉법소년 연령 하향

---

내 아이들 곁에 조두순을 두지 않겠다 — 한동훈과 한국형 제시카법

### 1 제시카라는 이름의 유래

2005년 2월, 미국 플로리다주에 사는 아홉 살 소녀 제시카 런스퍼드가 실종되었습니다. 수색 끝에 발견된 것은 소녀의 시신이었습니다. 범인은 바로 옆집에 살던 성범죄 전과자 존 쿠키. 그는 이전에도 성범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뒤 아무런 제한 없이 초등학교 바로 옆에 거주하면서, 이웃집 어린이를 납치해 살해한 것입니다.

분노한 플로리다주는 같은 해 '제시카법(Jessica's Law)'을 제정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명확합니다. 아동 대상 성범죄자가 출소한 뒤 학교, 놀이터, 어린이집 등으로부터 1000~2000 피트(약 300~600미터)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이후 미국 30개 이상의 주로 확산되었습니다.

### 2 한국에서 되풀이된 악몽

한국에서도 비슷한 공포가 반복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그는 경기도 안산의 기존 거주지로 돌아왔습니다. 피해 아동의 가족이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거리로 나와 항의했지만, 법적으로 그의 거주를 막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결국 피해자 가족이 이사를 갔습니다.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쫓겨나는 결과였습니다.

2022년에는 '수원 발발이'로 알려진 연쇄 성범죄자 박병화가 출소해 경기도 화성에 거주지를 정했습니다. 화성시장과 주민들이 퇴거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같은 해 또 다른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출소했습니다. 그가 어디에 살 것인가를 두고 전국적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문제의 구조는 매번 같았습니다. 형기를 마치고 나온 고위험 성범죄자가 어디에 살든 국가가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전자발찌를 채우고, 보호관찰관을 붙이고,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기존 제도의 한계였습니다. 학교 옆에 살든, 어린이집 건너편에 살든 막을 수 없었습니다.

### 3 한동훈, "지금 바로 그 때"

한동훈은 2023년 신년사에서 미국의 제시카법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우리나라 환경과 현실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 획기적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달 26일, 법무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5대 핵심 추진과제의 하나로 포함시켰습니다. 한동훈은 "고위험 성범죄자로부터 사회를 지키기 위한 대책이 있었지만 부족했다"고 진단하면서, 해외 사례를 검토해 국내 환경에 맞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실 국회에서는 이전에도 성범죄자 거주 제한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된 적이 있습니다. 피해자 주거지와 같은 시·군·구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거나, 접근금지 거리를 100미터에서 1~2킬로미터로 늘리는 법안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헌법상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매번 무산되었습니다.

한동훈은 이 문제를 우회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하려 했습니다. 단순히 '어디에 살지 마라'는 접근이 아니라, '국가가 지정한 시설에서 살아라'는 적극적 관리 모델을 선택한 것입니다.

### 4 법안의 구체적 내용

2023년 10월 24일,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법안의 대상은 모든 성범죄자가 아닙니다.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로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거나,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등 고위험군만 해당됩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거주 제한 명령 검토가 필요한 고위험 성범죄자는 2022년 말 기준 325명이었습니다. 그 중 매년 50~60명씩 출소할 예정이었습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보호관찰소장이 대상자의 연령, 건강, 생활환경 등을 토대로 거주지 제한이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필요하다고 보면 검찰에 제한 명령을 신청하고, 검찰이 다시 검토한 뒤 법원에 청구합니다. 최종 판단은 법원이 내립니다.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심사를 거치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법원이 거주지 제한 명령을 내릴 때는, 대상자가 사는 광역자치단체 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 시설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정한 '지정 거주시설'을 거주지로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거주 제한과 함께 성 충동 약물치료도 강화했습니다. 개정안은 검사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전문의 감정을 실시하고,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면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하도록 했습니다. 약물치료를 받은 성범죄자의 재범률은 1.3%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10%)에 비해 월등히 낮다는 통계가 근거였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미 출소한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에도 소급 적용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5 찬반의 갈림길

법안은 예상대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찬성 측의 논리는 직관적입니다. 아이들을 지켜야 합니다. 대구 지역 성범죄자 138명의 주거지를 분석한 결과, 77명(56%)이 초등학교 500미터 이내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 위험이 높은 사람이 학교 바로 옆에 사는 것을 국가가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것입니다.

반대 측의 우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미 수형 생활로 징벌을 받은 자에 대한 이중 처벌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빼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정 시설이 위치할 지역 주민들의 반발 문제, 사실상 재수감에 가까운 인신 구속의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한동훈은 이 논쟁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약탈적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국민들께서 얼마나 불안해하셨는지 잘 알고 있다. 한국형 제시카법을 통해 국가가 이들을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고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입법예고 이후 대상 성범죄자가 거주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심리상담과 치료 등이 제공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안에 추가했습니다.

위헌 논란과 인권 침해 우려를 의식하면서도, 아이들의 안전이라는 가치를 양보하지 않은 것입니다.

## 6 '당연한 일'을 하기까지

2024년 1월 2일, 한국형 제시카법은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난 직후였습니다. 그가 장관 재임 시절 구상하고 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까지 마친 뒤, 마지막 국무회의 관문은 후임자의 몫으로 넘어간 셈입니다.

조두순이 출소하던 2020년 12월, 온 국민이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분노만으로는 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뒤 2년이 넘도록 아무 정부도, 아무 장관도 제시카법을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위헌 소지'라는 네 글자가 모든 시도의 앞을 막았습니다.

한동훈은 그 네 글자를 뚫고 나갔습니다. 위헌 논란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법원의 심사라는 안전장치를 설계에 넣고, 약물치료라는 보완 수단을 붙이고, 거주지 변경 신청이라는 구제 절차를 추가하면서 법안의 균형을 잡았습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범죄자의 기본권 사이에서 어느 한쪽만 택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을 모두 고려하되 최종 저울추는 아이들 쪽에 놓은 것입니다.

325명. 숫자로 보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325명 가운데 한 사람이 아이가 등하교하는 길목에 살고 있다면, 그 아이의 부모에게 325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내 아이 곁에 있는 그 한 사람이 전부입니다.

한동훈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국가가 관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어떤 장관도 하지 않은 일을, 위헌 논란을 감수하면서 밀어붙인 것입니다. 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를 지키는 그의 원칙이 이 법안에도 그대로 관통하고 있습니다.

"나는 촉법소년이라 처벌 못 받아" — 70년 묵은 기준

## 1 열세 살이 칼을 들어도 감옥에 가지 않는 나라

촉법소년. 이 단어를 처음 들으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풀어쓰면 이렇습니다.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지만,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소년입니다.

대한민국 형법은 만 14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살인을 하든, 강도를 저지르든, 성폭행을 하든 감옥에 보낼 수 없습니다.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 —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 만 가능합니다.

이 기준은 1953년 형법 제정 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약 70년간 유지되어 온 기준입니다. 70년 전의 열세 살과 지금의 열세 살이 같을까요. 70년 전에는 초등학교도 못 다니는 아이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지금의 열세 살은 스마트폰을 쓰고, 인터넷으로 세상의 모든 정보에 접근하며, 신체적으로도 성인에 가까운 발달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형사 책임의 기준은 반세기 전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제도의 빈틈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 2 "나 촉법이라 어쩔 거야"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문제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촉법소년 제도를 범행에 적극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촉법소년을 데려다가 범행을 시키는 경우까지도 있었다."

성인 범죄 조직이 만 14세 미만의 아이를 범행 도구로 쓰는 것입니다. 아이가 붙잡혀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니, 위험한 역할을 아이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아이들 사이에서도 "나 촉법이라 경찰이 어쩔 수 없어"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법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거꾸로 아이를 범죄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역설이 벌어진 것입니다.

숫자가 이 현실을 보여줍니다. 촉법소년 범죄 건수는 2017년 7,897건에서 2021년 12,502건으로 급증했습니다. 4년 만에 60%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전체 소년범죄 중 강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율도 2005년 2.30%에서 2020년 4.86%로 두 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강력범죄 중 성범죄 비율은 같은 기간 48.55%에서 86.22%로 급등했습니다.

범죄가 늘어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범죄의 성격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집단 폭행을 가 하면서 영상을 촬영해 SNS에 올리고, 피해자에게 추가 가해를 예고하는 식의 흉포한 범죄가 반복되었습니다. 사회는 공포에 질렸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형사법정에 세울 수 없었습니다.

### 3 법무부, 4개월간의 검토

한동훈은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구성했습니다. 법무부 내부 전문가, 소년사법 관련 연구자, 현장 실무자들이 참여했습니다. TF의 과제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연령을 몇 살로 낮출 것인가. 둘째, 낮추는 것만으로 충분한가. 셋째, 낮추면서 동시에 보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TF는 12세로 낮출지, 13세로 낮출지, 또는 죄명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할지 등을 논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만 12세로 2살 낮추겠다고 했지만, 법무부는 대통령 공약을 그대로 옮기는 대신 독자적으로 적정 기준을 검토했습니다.

4개월 뒤인 10월 26일, 법무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1살 낮추기로 한 것입니다.

왜 12세가 아니라 13세였을까요. 법무부는 세 가지 근거를 들었습니다. 첫째, 흉포화된 소년범죄로부터 국민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 둘째,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13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에 달한다는 점. 셋째, 13세를 기준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구분하는 우리나라 학제입니다.

70%라는 숫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을 받는 아이들 10명 중 7명이 13세입니다. 10세, 11세, 12세는 합쳐도 30%에 불과합니다. 범죄의 무게 중심이 13세에 집중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연령대 한 살만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시켜도 촉법소년 제도의 악용을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 4 처벌만이 아닌, 교화와 보호를 함께

한동훈이 이 정책에서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사실 연령 하향 자체가 아닙니다. 연령을 낮추는 것과 동시에 내놓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의 나머지 부분입니다.

한동훈은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소년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부족하다는 우려를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를 감옥에 보내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그 전에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그 이후에 해야 할 일을 함께 설계한 것입니다.

소년원의 처우를 개선했습니다. 기존 10~15인실이었던 소년원 생활실을 4인실로 소규모 화하고, 급식비를 아동복지시설 수준으로 인상했습니다. 소년원은 형벌 시설이 아니라 교육 시설입니다. 아이들이 다시 사회에 나왔을 때 범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려면, 수용 기간 동안의 환경이 최소한의 인간적 품위를 갖춰야 합니다.

교육도 강화했습니다. 교육부와 협력해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에 소년원을 포함시키고, 소년교도소에 검정고시반 필수과정을 신설했습니다. 수도권에는 학과교육 중심의 소년전담 교정시설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공부할 기회를 잃은 아이에게 다시 배움의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소년 성폭력 사범을 위한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피해자 관점 교육을 도입했습니다. 가해 소년이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어떤 고통을 주었는지 이해하게 하는 교육입니다.

피해자 보호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소년보호절차에서 피해자에 대한 통지제도를 개선하고, 피해자의 법정 참석권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SNS와 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가해자의 피해자 접근금지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종전에는 가해 소년이 보호처분을 받은 뒤에도 SNS로 피해자에게 접촉하거나 협박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를 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인권 보호 장치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우범소년에게 장기 보호관찰과 소년원 송치 등 과도한 보호처분을 부과하는 관행을 폐지하고,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에 대해 소년이 이의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했습니다.

처벌의 문턱을 낮추면서도, 처벌의 질을 높이고, 교화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 소년의 인권까지 챙기는 다층적 설계였습니다.

5 반대의 논리, 그리고 한동훈의 응답

이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찮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14세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는 점, 미성년자 전과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반대의 주된 근거였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명확히 반론했습니다. "국제인권기준은 국내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고, 문화적 특성과 사회적 환경에 따라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국가마다 다양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프랑스, 캐나다, 영국, 호주, 미국 등 형사미성년 연령이 13세 미만인 국가도 다수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미성년 전과자 양산 우려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마련했습니다. 법무부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더라도 대부분의 소년범은 기존과 같이 소년부로 송치되고, 계획적 살인범이나 흉악범같이 아주 예외적인 경우만 형사처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취학과 취업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13세에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전과 조회 시 회보를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 6 처벌과 보호 사이에서

한동훈이 발표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의 핵심은, 처벌을 강화하는 것과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모순이 아니라는 인식에 있습니다.

아이는 보호해야 합니다. 그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호라는 이름 아래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구조가 되면, 그 구조의 틈을 타고 더 많은 아이가 범죄에 이용당하고, 더 많은 아이가 피해를 입습니다. 제도가 보호하려는 바로 그 아이들을 오히려 위험에 빠뜨리는 역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한동훈은 이 역설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연령을 1살 낮추는 것은 상징적 조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촉법소년의 70%가 13세에 집중되어 있다는 데이터를 놓고 보면, 이 1살의 차이는 제도의 실효성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조치입니다.

동시에 소년원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을 강화하고, 심리치료를 도입하고, 피해자 보호를 법제화한 것은 "우리는 아이들을 감옥에 넣으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회로 돌려보내려는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한동훈은 "오랫동안 난제로 남아 있던 소년범죄 대응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문제뿐만 아니라 교정·교화 강화, 피해자 보호 및 인권보호 개선, 인프라 확충을 망라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70년 동안 아무도 손대지 못했던 기준을, 4개월간의 실증적 검토를 거쳐 바꾸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바꾸면서도 처벌 일변도가 아니라 교화와 보호를 함께 설계했습니다. 아이를 처벌 하되 아이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 그것이 한동훈이 이 정책에 담은 철학이었습니다.

7 씨앗은 뿌려졌으나, 열매는 아직

그러나 이 종합대책은 아직 법으로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2022년 12월, 법무부는 소년법 및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3세 소년이 형사책임 능력을 갖췄다고 단정짓기 어렵다"며 반대 의견서를 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 등을 근거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법원행정처, 인권위, 그리고 야당의 신중론이 겹치면서 국회 법사위 심사 단계에서 사실상 멈추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에도 관련 법안은 끝내 본회의까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한동훈이 뿌린 씨앗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3년 뒤입니다. 2025년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최근 자신이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면 온갖 사고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국무회의 의제화를 지시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마약이나 성범죄는 낮추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동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길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숙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면서, 정부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 입법은 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촉법소년 범죄는 한동훈이 종합대책을 발표한 2022년 이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촉법소년 검거 건수는 2021년 11,677명에서 2025년 21,095명으로 4년 만에 거의 두 배가 되었습니다. 한동훈이 경고했던 '홍포화'는 숫자로 증명되고 있지만, 그것을 막을 법적 도구는 여전히 70년 전 기준에 묶여 있습니다.

한동훈이 2022년에 이 문제를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데이터와 종합대책이 뒷받침된 정책 패키지로 처음 정리해 공론의 장에 올려놓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가 설계한 종합 대책 — 연령 하향, 소년원 처우 개선, 교육 강화, 피해자 보호 법제화 — 은 이후 어떤 정부가 이 문제를 다루든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국회와 국민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 57년 묵은 빗장을 열다

국가배상법 개정과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

---

57년 묵은 빗장을 열다 — 국가배상법 개정과 한동훈의 약속

### 1 어머니의 8년

2016년 3월, 육군에 입대한 지 7개월 된 홍정기 일병의 몸에 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구토와 두통이 이어졌습니다. 연대 의무중대에서 혈소판 감소를 확인했지만 응급상황이 아니라고 돌려보냈습니다. 같은 날 민간병원에서는 백혈병 가능성이 크니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부대 대대장은 보고를 받고도 상급병원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증상이 악화되어 사단 의무대 응급실로 실려갔으나 담당 군의관은 활력징후가 정상이라는 판단으로 응급후송을 하지 않았고, 국군춘천병원 외진도 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불발되었습니다.

홍정기 일병은 발병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합병증에 걸려, 병명도 제대로 모른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스무 살이었습니다.

어머니 박미숙 씨는 군 당국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벽이었습니다. 이중배상금지. 군인이 직무 중 죽거나 다쳐도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받으면 국가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이미 사망보상금을 받았으니, 국가의 잘못을 따지는 배상 소송은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20년을 키워 나라에 보낸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과실이 명백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국가가 스스로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게 막고 있었습니다.

### 2 1967년의 빗장

이 벽은 1967년에 세워졌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파병된 군인들이 소송을 통해 배상금을 받게 되자, 재정 부담을 우려한 박정희 정부가 국가배상법을 개정해 순직·공상 군인에게는 보상만 주고 배상 청구를 막았습니다.

1971년 대법원은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박정희 정권은 1972년 유신헌법을 만들면서 이중배상금지 규정을 아예 헌법에 집어넣었습니다. 대법원이 위헌이라 했으니 법률 수준에서는 뒤집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못을 박은 것입니다.

이후 반세기. 군인과 경찰은 목숨을 걸고 복무하되, 국가의 잘못으로 죽어도 유족은 정해진 보상금만 받아야 했습니다. 슬픔에 대한 위자료, 국가 과실에 대한 책임 추궁, 그런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못살던 시절 재정을 아끼려고 세운 빚장이, 나라가 부유해진 뒤에도 반세기 넘게 군인 유족의 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 3 법무부 장관 한동훈 — "이제는 바뀔 때가 됐습니다"

2023년, 홍정기 일병 유족의 소송은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국가의 과실은 인정되었지만, 이중배상금지 조항 때문에 배상은 불가능하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우회적으로 화해 권고를 내렸습니다. 국가가 유족에게 25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사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부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부는 현행법상 화해권고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은 이중배상금지의 문제점에 공감한다며 국가배상법 개정 추진을 약속하고, 정부 입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제는 바뀔 필요가 있고 그럴 때가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차제에 국가배상법을 개정해서 유족에게 독자적 위자료를 청구하는 길을 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정부 소송의 대리인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국가의 편에 서는 것이 직무입니다. 그런데 한동훈은 자기 부처의 소송 상대방인 유족의 손을 들어준 셈이었습니다. 법을 지키되 법이 잘못되었으면 법을 바꾸겠다는 것. 원칙을 지키면서도 원칙 너머의 사람을 보는 것. 그것이 한동훈의 방식이었습니다.

2023년 12월 15일,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 박미숙 씨가 정부과천청사에서 한동훈 장관을 만났습니다. 1시간이 넘는 면담이었습니다.

한동훈은 "어머니께서 고생 많으셨다. 이 법은 어머니가 바꾸시는 것이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국회에서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군 사망 사건 유가족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뒤에는 사건 진행 과정을 질문하고 메모했습니다.

"이 법은 어머니가 바꾸시는 것이다." 장관이 유족에게 한 이 말에는, 법을 바꾸는 주체가 정부도 국회도 아닌 피해자 자신이라는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정치인이 흔히 하는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와는 결이 다른 말이었습니다.

2023년 10월 24일, 전사·순직 군경 유족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법안은 폐기되었습니다.

#### 4 당대표 한동훈 — 약속을 지키다

장관직을 떠난 뒤에도, 당대표가 된 뒤에도 한동훈은 이 약속을 놓지 않았습니다.

2024년 11월 26일, 한동훈은 국회에서 다시 한번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 박미숙 씨를 만났습니다. 장관이 아니라 당대표의 자격이었습니다. 직함은 바뀌었지만 마주 앉은 사람은 같은 어머니였습니다.

한동훈은 "나라가 누구를 배출했느냐는 것 못지않게 누구를 기억하느냐에 따라 품격이 정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가 정말 못살 땐 제대로 예우하고 보상할 만한 여력이 없어 헌법까지 개정해 군인 순직자들에 보상길을 막았고, 그 헌법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은 국가배상법을 개정하면 인정할 수 있다. 너무나 명분이 커 하루빨리 법 개정을 완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라의 품격은 누구를 배출했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 한 문장에 한동훈이 이 법안에 매달린 이유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군인의 유족에게 "이미 보상을 받았으니 더 이상의 책임은 없다"고 말하는 나라. 그 나라의 품격을 한동훈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 5 2024년 12월 10일 — 57년 만의 변화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재석 286인 중 찬성 284인, 반대 2인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사실상 만장일치였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전사·순직한 군인과 경찰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1967년 이래 57년간 유족의 앞을 가로막던 빗장이 열린 것입니다.

같은 날, 군인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법안 묶음이 함께 통과되었습니다. 순직 군인과 공무원의 유족 연금 지급 기준을 사후 특진 계급에 맞춰 산정하도록 하는 군인재해보상법과 공무원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군인이 적법한 직무수행 중 고의나 중과실 없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전사자 유족의 재심사 기한을 120일로 명시한 군인사법 개정안, 용도 폐지된 군사시설 부지를 군인 복지 목적으로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한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도 가결되었습니다.

국가배상법 개정 하나가 아니라, 군인의 삶과 죽음을 둘러싼 제도 전반이 한꺼번에 손질된 것입니다.

## 6 장관의 약속, 당대표의 이행

이 법안들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출발점에 한동훈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중배상금지의 부당함을 인정하고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 2023년이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되자 당대표가 되어 22대 국회에서 다시 밀어붙였습니다.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를 장관 시절 한 번, 당대표 시절 한 번, 두 번 만나 같은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 박미숙 씨는 아들의 죽음 이후 여야 주요 인사들을 만나며 법 개정을 호소하고 다녔습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을 안고 국회를 돌아다니는 어머니. 그 어머니의 호소에 응답하여 법을 바꾼 정치인. 한동훈은 그 어머니에게 "이 법은 어머니가 바꾸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바꾸려는 그 법이 실제로 바뀔 수 있도록, 장관의 자리에서도 당대표의 자리에서도 같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나라를 지키다 죽은 군인의 유족이 "내 자식이 개값만도 못하냐"고 울부짖어야 하는 나라. 그 나라의 법을 바꾸는 것은 거대한 정치적 업적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해야 할 일'이 57년간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이 이 나라의 현실이었

습니다. 한동훈은 그 방치된 '당연함'을 실행에 옮긴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강강약약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강한 자의 불법에 엄정한 것만이 아니라, 약한 자의 울음에 응답하는 것. 한동훈에게 강강약약은 수사 철학인 동시에 삶의 태도였습니다.

## 여의도 저승사자를 되살리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과 서민의 방패

###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부활

여의도 저승사자의 부활 — 한동훈, 취임 당일 서민의 방패를 되세우다

2022년 5월 17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법무부 대강당. 한동훈이 제69대 법무부 장관 취임사를 읽고 있었습니다. 49세, 헌정사상 검사 출신 최연소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이었고, 거대 야당 180석이 그를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취임사의 어조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첫 번째 행동은 빠르고 단호했습니다.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오늘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발을 떼겠습니다."

'오늘 즉시'라는 말에 밑줄을 그어야 합니다. 장관 취임식에서 흔히 나오는 수사(修辭)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다음 날인 5월 18일,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공식 설치되었습니다. 말한 지 하루 만에 조직이 가동된 것입니다.

없앤 사람, 되살린 사람

이 조직의 역사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2013년 5월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되었다가, 증권가와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듬해 서울남부지검으로 옮겨왔습니다.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거래소 등 관련 기관의 전문 인력이 검사와 한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는 형태였습니다. '합동수사'라는 이름 그대로, 검찰의 수사력과 금융기관의 전문성을 한데 묶은 조직이었습니다.

성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출범 직후 7개월 동안 126명을 재판에 넘기고 240억 원의 불법수익을 환수했습니다. 한 해 많게는 100건 가까운 사건을 처리하며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별칭이 붙었습니다. 주가조작, 시세조종, 내부자거래, 불공정공시 등 자본시장을 좀먹는 범죄들을 전담하는 유일한 상설 수사기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이 2020년 1월 사라졌습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 13곳을 폐지하면서, 증권범죄합수단도 함께 없앤 것입니다. '검찰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검찰의 직접 수사 역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이었습니다.

합수단이 사라진 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라임자산운용 사태가 터졌습니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이 터졌습니다. 신라젠 주가조작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수조 원대의 금융 범죄가 연쇄적으로 불거졌지만, 전담 수사 조직은 이미 해체된 뒤였습니다. 합수단 부활론이 고개를 들었으나, 추 전 장관은 선을 그었습니다.

2년 4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서민 투자자들은 라임과 옵티머스에서 수천억 원을 잃었습니다. 주가조작 세력은 전담 수사 조직이 사라진 증권가를 활개치며 돌아다녔습니다.

#### 48명의 정예 조직

한동훈이 되살린 조직은 이전보다 더 컸습니다. 검사와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유관기관 직원 등 총 48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종전의 합수단(47명)이나 그 사이 운영되던 수사협력단(46명)보다 큰 규모였습니다.

국세청 정예요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관계자들이 파견되었습니다. 검찰의 강제수사 권한, 국세청의 자금추적 역량, 금감원의 시장감시 전문성, 거래소의 거래데이터 분석 능력이 한 지붕 아래 모인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금융 범죄의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주가조작범은 수십 개의 차명계좌를 동원합니다.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복잡한 파생상품 구조를 만들고, 허위 공시로 투자자를 속입니다. 이런 범죄를 수사하려면 금융시장의 작동 원리를 아는 전문가,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세무 전문가, 거래 패턴을 분석하는 데이터 전문가가 검사와 나란히 앉아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해야 합니다.

일반 검찰 수사부가 이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합수단처럼 전문 인력이 상시 결합된 조직과,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 기관 저 기관에 협조 공문을 보내는 방식은 속도와 밀도에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 장관의 의지, 조직의 확장

한동훈은 합수단 부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금융·증권 분야에서 시작한 전문 합동수사 모델을 다른 영역으로 확장했습니다.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보조금 사기, 공공조달 비리, 국가 예산 횡령 등 국민의 세금을 갉아먹는 범죄를 전담하는 조직입니다.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도 신설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합수단은 출범 5개월 만에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급 20명과 중간간부급 78명 등 111명을 입건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매년 수천억 원의 피해를 낳는, 문자 그대로 서민을 울리는 범죄입니다.

세 개의 합동수사단이 나란히 선 모습입니다. 여의도의 주가조작범, 정부 예산을 빼먹는 재정 범죄자, 노인과 사회 초년생을 노리는 보이스피싱 조직. 한동훈이 취임사에서 말한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의 전선(戰線)은 이렇게 세 갈래로 펼쳐졌습니다.

### 취임사에 담긴 철학

한동훈의 취임사를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검찰 개혁, 진짜 형사사법 시스템 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문장에 그의 수사 철학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검찰 개혁이라는 단어는 당시 정치권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줄이는 것'과 동의어처럼 쓰이고 있었습니다. 한동훈은 그 프레임을 정면으로 뒤집었습니다. 검찰 개혁은 검찰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수사 체계를 세우는 것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밤길 다니기 겁나는 사회, 조폭이 설치하는 사회, 서민들이 피해를 당하고도 그냥 참고 넘어가기를 선택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 뒤에 곧바로 합수단 부활이 선언되었습니다. 추상적 가치가 아니라 구체적 행동으로 첫 문장을 뒷받침한 것입니다. 강강약약(強強弱弱) — 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에게는 따뜻하게. 그가 검사 시절부터 지켜온 원칙이 장관의 첫 행보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2년 4개월의 공백이 남긴 것

여의도 저승사자가 사라진 2년 4개월 동안, 대한민국 자본시장에서 벌어진 일들을 돌이켜 보면 합수단 폐지의 대가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습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약 1조 6천억 원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로 약 5천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이 돈의 상당 부분은 은퇴자금을 맡긴 중장년층, 목돈을 불려보려던 일반 투자자들의 것이었습니다.

합수단이 있었다면 이 피해를 전부 막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담 수사 조직이 여의도를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범죄 억지력이 됩니다. 저승사자가 떠난 여의도는 범죄자들에게 빈집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한동훈은 그 빈집에 다시 자물쇠를 달았습니다. 그것도 취임 당일, 단 하루 만에. 어떤 장관이 취임 첫날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는 대개 상징적입니다. 그러나 한동훈의 첫날은 상징이 아니라 실행이었습니다. 취임사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서울남부지검에는 48명의 수사관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 “저는 다 걸겠습니다”

1 대 180의 투쟁, 한동훈의 국회 시절

“저는 다 걸겠습니다” — 한동훈, 1 대 180의 싸움에서 이기다

### 1 청담동, 그리고 한 문장

2022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장.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의혹을 던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 청담동 술집에서 변호사 30명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유튜브 채널이 녹취록이라며 음성 파일을 공개했고, 야당은 '제2의 국정농단'이라며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한동훈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저 자리에 있었거나, 비슷한 자리에 있었거나 근방 1킬로미터 안에 있었으면 저는 법무부 장관직을 포함해서 앞으로 어떤 공직이든 다 걸겠습니다."

"다 걸겠습니다." 공직 전체를 걸었습니다. 모호한 해명도, 신중한 유보도 아니었습니다. 거짓이면 모든 것을 내놓겠다는, 자신의 존재를 담보로 건 한 문장이었습니다.

이후 사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첼리스트 본인이 경찰에 출석해 해당 내용이 모두 거짓말이었다고 실토했습니다. 한동훈은 "파도가 밀려나면 누가 바지 벗고 수영했는지 알 수 있다"며, 의혹을 부추긴 야당 의원들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법정에서는 첼리스트가 증인으로 출석해 "태어나서 한 번도 그분들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에피소드가 중요한 것은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싸움 방식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는 몸을 사리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판돈으로 올려놓고, 상대방에게도 똑같이 걸라고 요구합니다. 그 자세가 가장 극적으로 발휘된 순간이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이었습니다.

## 2 첫 번째 시도 — 2023년 2월, 부결

2023년 2월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1야당 대표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되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제1야당의 현직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국회에서 표결하는 것 자체가 전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 자격으로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에 섰습니다.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이 혐의의 골자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부결. 찬성 138표, 반대 138표, 무효 11표, 기권 9표. 찬반 동수에 무효·기권이 합쳐져 과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168석의 민주당이 사실상 당론으로 부결시킨 것입니다. '방탄 국회'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숫자 앞에서 한동훈은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통이라면 여기서 끝입니다. 한 번 부결된 체포동의안을 다시 올리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큼니다. 또 부결되면 검찰의 위신이 무너지고,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생명도 타격을 입습니다.

한동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 3 7개월의 준비, 그리고 두 번째 도전

2023년 9월 18일, 검찰이 이재명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번에는 백현동 개발 특혜, 대북 불법 송금 의혹, 위증교사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한동훈은 7개월 동안 수사팀을 독려하며 증거를 보강한 것입니다.

2023년 9월 21일, 두 번째 체포동의안 표결이 열렸습니다.

한동훈은 다시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30분간 이재명의 혐의를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대규모 비리의 정점은 이재명 의원이고, 이 의원이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다."

그리고 이재명 자신이 석 달 전 국회에서 한 약속을 꺼냈습니다. "석 달 전인 지난 6월 19일, 이재명 의원은 바로 이 자리에서 '저에 대한 정치수사에 대해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국민들께 자발적으로 약속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누가 억지로 시킨 약속도 아니었다. 정당한 수사니 뭐니 하는 조건을 달지도 않겠다고 스스로 명시적으로 약속한 것이어서 다른 해석의 여지도 없다.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킬 때다."

이재명 자신의 말로 이재명을 묶은 것입니다.

#### 4 본회의장의 30분

한동훈이 발언대에 서 있던 30분 동안 야당 의석 쪽에서는 격한 고성과 항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짧게 하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자꾸 공개하느냐", "뭘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느냐", "그만 내려와", "멈춰", "한동훈 검사", "여기는 법정이 아니고 국회다." 야당 의원들의 고함은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국회의장이 "좀 요약해서 설명해 달라"는 요청을 서너 차례나 했습니다. 야당은 피의사실 공표라며 발언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한동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께서 이 사안 자체가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 앞에서 설명할 의무가 있다. 그 임무를 다하겠다."

180석의 거대 야당이 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고성과 야유와 항의 속에서 한 사람이 발언대에 서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1 대 180. 그 구도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30분이었습니다.

## 5 149표 — 1표 차이의 드라마

표결 결과, 재석 295명 중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 가결이었습니다.

가결 요건은 출석 의원 과반인 148표. 149표는 가결선을 딱 1표 넘긴 숫자였습니다. 2표만 덜 나왔어도 부결이었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짚어야 합니다. 국민의힘 의석은 111석이었습니다. 친여 무소속과 정의당 등을 다 합쳐도 121석. 149표가 나오려면 민주당에서 최소 28명이 이탈해야 합니다. 실제로 민주당에서 최소 21표의 가결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무소속 포함 시 29명 이탈)

과반 의석을 가진 원내 1당 당수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예상 밖의 일이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이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의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파기와 단식의 진정성에 대한 회의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한동훈이 본회의장에서 30분간 쏟아낸 설명은 — 고성 속에서도 끝까지 이어진 그 설명은 — 민주당 이탈표를 만들어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2월의 138표에서 9월의 149표로. 7개월 사이에 찬성표가 11표 늘었습니다. 그 11표의 차이가 부결과 가결을 갈랐습니다.

## 6 그 이후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 이재명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통과시켰지만, 구속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한동훈은 영장 기각 후에도 "검찰이 흔들림 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관련 사안으로 이미 21명이 구속됐다. 무리한 수사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영장이 기각되었으므로 실패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넓은 맥락에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68석의 거대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시킨 것 자체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야당 내부에서 29명의 이탈표가 나왔다는 것은, 이재명에 대한 당내 불만이 표결로 드러난 최초의 순간이었습니다.

한동훈은 이 과정에서 자신의 브랜드를 확립했습니다. 거대 야당의 벽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사람. 고함 속에서도 발언대를 내려오지 않는 사람. 자기 자신을 걸고 싸우는 사람. "저는 다 걸겠습니다"라는 한 문장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한 반박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그의 정치적 정체성을 정의하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강한 자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다. 숫자가 불리해도 원칙을 내려놓지 않는다. 한 번 실패하면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다시 도전한다. 1 대 180의 싸움에서 한동훈이 보여준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 당대표 취임 닷새, 피해자를 먼저 보다

티메프 사태와 한동훈의 신속한 조치

---

티메프 사태와 한동훈의 신속한 조치

### 1 당대표가 된 지 닷새째 되던 날

2024년 7월 예상치 못한 폭탄이 터졌습니다. 온라인 쇼핑 플랫폼 티몬(TMON)과 위메프(WeMakePrice)의 판매대금 정산이 멈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일부 판매자들의 불만 정도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사이에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 2 1조 원의 도미노

두 플랫폼의 모회사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큐텐(Qoo10)이었습니다. 큐텐은 물류 자회사의 나스닥 상장을 위해 자금을 끌어다 쓰면서, 판매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정산금을 돌려막기 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정산 주기를 슬금슬금 늘리더니, 2024년 7월에 이르러 아예 돈줄이 끊긴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미정산 규모는 7월 25일 기준 2,134억 원에서 불과 몇새 만인 7월 31일 2,745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Lawtimes 6~7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1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피해는 도미노처럼 번졌습니다. 가구를 납품한 소공인, 여행 상품을 올린 영세 여행사, 상품권을 맡긴 중소기업체들이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행을 예약한 소비자들은 환불도 출발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제대행사와 간편결제사들이 티몬·위메프에서 철수하면서 환불 자체가 막혔습니다. 7월 24일부터 피해자들이 사옥 앞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위메프 본사 로비. 한여름 밤, 아이 손을 잡고 나온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가족 여행 상품을 결제했는데 출발도, 환불도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옆에는 신혼여행 비용을 날릴 위기에 처한 예비 신랑이 있었고, 그 뒤로는 납품 대금 수천만 원이 묶여 직원 월급을 줄 수 없다는 소규모 판매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울었고, 어떤 이는 지쳐서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 3 첫 번째 메시지 — "피해자가 먼저입니다"

한동훈은 당대표 당선 후 첫 SNS 메시지의 주제로 티몬·위메프 사태를 택했습니다. "책임 져야 할 사람들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당정이 협력해 강구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썼습니다. Khan

정치인의 취임 첫 메시지는 대개 지지자를 향한 감사나 당 결속의 호소입니다. 한동훈은 그 자리에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당의 사정이 아니라 국민의 사정을 먼저 본 것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당대표로서 해야 할 일이 수십 가지인데 가장 먼저 꺼낸 것이 당장 돈을 떼인 사람들이었다는 것. 그것은 계산이 아니라 체질이었습니다. 검사 시절부터 한동훈의 시선은 늘 피해자를 향해 있었습니다. 법무부 장관 시절 인혁당 피해자의 '빛고문'을 한 달 만에 해결한 것도, 교정공무원 처우를 직접 확인하러 교도소를 찾은 것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부터 만나고, 그 사람의 문제부터 풀겠다는 것. 그것이 한동훈의 방식이었습니다.

### 4 당정협의 — 분노 대신 구조를 바꾸다

말에 그치지 않았습다. 한동훈은 즉각 당정협의의 구조를 가동시켰습니다.

8월 6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티메프 사태 관련 제도 개선 방안과 피해자 구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Sedaily 취임 2주 만이었습니다.

대책의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정산 기한 단축입니다. 이커머스 업체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정산 기한을 현행 40~60일보다 대폭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Sedaily 플랫폼이 판매자의 돈을 수십 일간 손에 쥐고 있을 수 있는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에스프로 시스템 도입입니다. 판매 대금을 플랫폼이 직접 만지는 것이 아니라, 은행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결제 대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 배송이 완료된 후에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Sedaily 플랫폼 경영자의 양심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손을 댈 수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셋째, PG사 규제 강화입니다. PG사의 등록 요건과 경영 지도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Sedaily

한동훈이 이 대책들을 밀어붙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위메프 로비에 앉아 울던 그 젊은 부부, 직원 월급날을 넘긴 그 소상공인, 신혼여행을 포기해야 했던 그 예비부부. 같은 일이 다시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뜯어고치는 것은 권한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 5 규제의 빈틈, 그리고 약자의 눈물

이 사태가 드러낸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쿠팡처럼 직접 상품을 사서 파는 업체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40~60일 안에 정산 의무가 있지만, 티몬이나 위메프 같은 오픈마켓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되어 정산 주기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었습니다. Sedaily

법에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그 구멍이 수천억 원의 피해를 쏟아낸 것입니다.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같은 패턴으로 일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을 만든 것도, 스토킹처벌법 강화를 밀어붙인 것도, 제시카법을 추진한 것도 모두 '약자가 피해를 입었는데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도의 빈틈을 메우는 작업이었습니다. 사건이 터진 뒤 범인을 잡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같은 사건이 다시 터질 수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것이 한동훈이 '약자를 위한 법'이라는 말에 담은 뜻이었습니다.

#### 6 사재를 털겠다던 사람, 피해자를 먼저 본 사람

큐텐의 구영배 대표는 "사재를 털어서라도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날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고객 환불부터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플랫폼 경영자들의 말은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한동훈은 다른 종류의 약속을 했습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 검찰은 구영배 대표의 자택과 티몬·위메프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 정부는 중소기업인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투입했고, 당정협의를 통해 재발 방지 종합대책이 나왔습니다.

구영배는 자기 회사의 위기 앞에서 자기를 먼저 보았습니다. 한동훈은 남의 위기 앞에서 피해자를 먼저 보았습니다. 당대표 취임 닷새, 정치적으로 자기 자리를 다지는 것이 먼저일 수 있는 시점에서, 한동훈은 사옥 로비에 앉아 울던 사람들의 편에 섰습니다.

그것이 강강약약입니다. 강한 자에게 엄정하고, 약한 자에게 따뜻한 것. 플랫폼 경영자의 책임을 묻는 것이 강강(強強)이라면, 피해 소비자와 영세 판매자를 위해 제도의 빈틈을 메우는 것이 약약(弱弱)입니다. 한동훈은 당대표로서의 첫 시험에서, 검사 시절부터 지켜온 그 원칙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 국가의 과오를 인정하다

인혁당 빚고문 해결과 제주 4·3 직권재심

---

국가 과오 인정 및 피해자 구제 — 인혁당·4·3 사건 (2022~2023) 인혁당 고문 사건 해결, 제주 4·3 사건 직권 재심을 추진했습니다. "진영논리나 정치 논리는 배제하고 오로지 개별 국민의 억울함을 생각했다"는 원칙 아래, 보수 정권에서 과거사 피해자를 구제한 이례적 행보였습니다.

국가가 진 빚, 국가가 갚다 — 한동훈, 인혁당과 4·3의 억울함을 풀다

184세 노인에게 15억을 토해내라는 나라

이창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022년 당시 84세. 1974년 유신정권 시절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2차 인혁당 사건)에 연루되어 감옥에 갔습니다.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였습니다. 그 혐의는 거짓이었습니다. 인혁당 사건은 대표적인 간첩 조작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구타와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고 장기간 수감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2008년, 피해자 76명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뒤이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판결에 따라 2009년 배상금을 가지급 받았습니다. 국가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정의가 작동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년 뒤인 2011년 대법원이 "배상금 이자 계산이 잘못됐다"며 배상금의 절반인 약 5억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대법원이 이자 산정 기준 시점에 관한 판례를 변경하면서, 이미 지급된 배상금 중 일부가 초과 지급분이 된 것입니다.

이창복 씨는 받은 배상금으로 평화재단 설립에 보태고 여생을 보낼 시골집을 샀습니다. 5억 원을 돌려줄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이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017년에는 이씨 자택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했습니다.

돌려주지 못한 5억 원에는 해마다 이자가 붙었습니다. 원금 5억 원에 이자만 9억 6천만 원이 쌓였습니다. 국가로부터 10억 9천만 원을 받았다가 오히려 15억 원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간첩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던 사람이, 무죄를 받고 배상금을 받았다가, 판례가 바뀌는 바람에 받은 돈보다 더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국가가 사채업자처럼 이자를 물리는 형국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빚고문'이라 불렀습니다.

## 2 첫 출근날 보고서를 본 장관

2022년 5월 18일.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으로 첫 출근을 한 날입니다. 그날 올라온 보고서 중에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와 이창복 씨에게 화해를 권고한 사안이었는데, 법무부는 박범계 전 장관 시절 1차 화해권고를 거부했고,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5월 18일에도 2차 화해권고를 거부한 상태였습니다.

한동훈은 이 보고서를 보고 문제를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입장을 바꿨습니다.

2022년 6월 20일, 한동훈 장관 지시로 서울고검, 국가정보원과 함께 '초과 지급 국가배상금 환수 관련 관계기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창복 씨가 국가에 갚아야 하는 과다 배상금의 지연 이자 약 9억 6천만 원을 면제하고, 원금 5억 원만 분할 납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한동훈은 그날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책임 있는 당국자가 책임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했다. 오로지 개별 국민의 억울함만을 생각했고, 진영논리나 정치 논리는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말의 무게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혁당 사건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첨예한 진영 대립의 상징 중 하나입니다. 진보 진영은 유신정권의 대표적 인권 유린 사례로, 보수 진영 일부는 국가안보 차원의 불가피한 조치로 각각 달리 해석해왔습니다. 보수 정권의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 피해자의 편에 서는 것은 정치적으로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한동훈은 진영 논쟁에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법무부가 소송수행정인 국정원과 깊이 논의해 결정한 것이며, 오직 팩트, 상식, 정의의 관점에서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려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논리는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산수(算數)였습니다. "가지급 이후의 판례변경이라는 이례적 사정으로 이른바 '줬다 뺐는' 과정이 생겼고, 국가배상으로 받을 돈은 6억인데 토해내야 할 돈은 15억이 되어 그대로 방치하면 해당 국민이 억울해지게 됐다." 누가 보아도 불공정한 구조라는 것입니다.

### 3 한 사람이 아니라 제도를 바꾸다

이창복 씨 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한 뒤, 한동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2년 8월, 인혁당 사건의 다른 피해자 2명(고 전재권 씨와 정만진 씨의 유족)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각각 지연이자 8억 9천만 원과 3억 7천만 원을 면제하고 원금만 분할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한동훈은 이 조치에 대해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이창복 씨에 이어, 진영 논리를 초월해 민생을 살피고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하는 국가의 임무를 다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혁당 피해자 77명의 배상금 490억 원 중 211억 원이 깎였고, 39명은 받은 돈보다 더 큰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의 이자를 면제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개별 사안마다 법원의 화해권고를 기다려야 하는 구조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피해자 이창복 씨의 아들 이송우 시인은 아버지의 빚고문이 끝난 것에 대해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촛불정부라는 문재인 정부가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았죠. 그런데 '국민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취임사와는 멀리 떨어진 일만 하다 퇴임하지 않았습니까." 이창복 씨 본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우리에게 저지른 잘못이 큼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걸 해결해주지 않고 있다가, 결국 다시 보수정부가 문제를 해결해주니, 참 절반의 성공이라 해야 할지요."

진보 정권에서 풀지 못한 매듭을 보수 정권의 장관이 풀었습니다. 그 장관은 진보도 보수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국민이 있으니 풀어야 한다는 것, 그것만이 근거였습니다.

### 4 70년 전 억울함에 국가가 무릎 꿇다 — 제주 4·3 직권재심

한동훈의 과거사 구제는 인혁당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취임 석 달째인 2022년 8월, 그는 제주 4·3 사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1947년부터 1954년까지 제주도에서 벌어진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수만 명의 주민이 희생된 사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 수천 명은 죄가 없음에도 재판을 통해 내란죄·국방경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했습니다.

2022년 2월 개정된 4·3특별법에 따라 군사재판(군법회의)을 받은 수형인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광주고등검찰청 산하에 '제주 4·3 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설치되어 군법회의 수형인 340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했고, 이 중 250명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법에 명시된 직권재심 대상은 군사재판 수형인뿐이었습니다. 일반재판을 받은 수형인 약 1500명은 이 혜택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갔는데, 군사재판을 받은 사람은 국가의 도움을 받고, 일반재판을 받은 사람은 스스로 비용을 들여 재심을 청구해야 했습니다.

제주 4·3 도민연대의 한 가족은 그 모순을 온몸으로 겪었습니다.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에 거주하는 강철훈 씨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두 4·3 당시 재판을 받고 끌려가 다시는 제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군사재판을 받았고 아버지는 일반재판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직권재심을 통해 무죄를 인정받았지만, 아버지는 재판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이 간극을 메우라고 지시했습니다. "4·3특별법에 명시된 '군법회의'뿐만 아니라 '일반재판' 수형인들과 그 유가족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 필요성도 크다. 앞으로 4·3 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법에 명시된 범위를 넘어서는 지시였습니다. 한동훈은 이에 대해 "과거 정부가 일반재판 4·3 희생자까지 직권재심 업무를 확대하지 않은 것은 품이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사재판은 수형인명부가 존재하지만, 일반재판은 각각의 판결문을 전수조사해야 해 해독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손이 많이 가는 일이니 하지 않은 것이라면, 손이 많이 가더라도 해야 한다는 것이 한동훈의 판단이었습니다.

제주 4·3 유관 단체들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주 4·3 평화재단은 "이번 조치가 일반재판 수형인 명예회복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했고, 제주 4·3 연구소도 "4·3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계기"라고 평가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이 조치를 두고 "인혁당 피해자 이자 면제 결정에 이은 '탈진영' 행보"라고 보도했습니다.

5 왜 보수 정권의 장관이 이 일을 했는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혁당 사건은 박정희 정권의 과오입니다. 제주 4·3 사건은 대한민국 건국 초기의 비극입니다. 이 두 사건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일은 전통적으로 진보 진영이 자신들의 몫이라고 여겨왔습니다. 진보 정권이 집권하면 해결하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일부 성과를 냈지만 인혁당 빚고문이나 4·3 일반재판 수형인 문제는 끝내 풀지 못했습니다.

한동훈은 이 일을 '진보의 과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과오'로 보았습니다. 국가가 잘못된 일은 어느 정권이든 바로잡아야 합니다. 보수 정권이라고 해서 보수 정권의 과오를 외면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보수 정권이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할 때, 그 행위는 더 큰 무게를 갖습니다.

한동훈은 2023년 7월 제주를 직접 방문해 합동수행단의 업무를 점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의는 사법 시스템을 바탕으로 한다. 70여 년 전 일에 대한 직권재심은 전 세계적으로 이례적이지만, 현재 기준 사법 시스템 안에서 억울함이 풀려야 정당성이 있다. 우리 정부는 끝까지 지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

"끝까지 지치지 않고"라는 말이 마음에 걸립니다. 70년 전 사건의 판결문을 한 장 한 장 찾아 해독하고, 생존자를 확인하고, 유족을 만나고, 재심을 청구하는 일은 성과가 빨리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정치적으로 표가 되는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전 정부들이 "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미루었던 것입니다.

한동훈은 그 일을 했습니다. 인혁당에서는 빗고문을 끝냈고, 제주 4·3에서는 직권재심의 문을 넓혔습니다. 두 사건 모두 그의 정치적 기반인 보수 진영에서는 불편해할 수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는 불편함을 감수했습니다.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에 진영논리나 정치논리가 설 자리는 없다"는 말은 수사(修辭)가 아니라, 실제 행정 결정으로 뒷받침된 원칙이었습니다.

## 약자를 위한 법,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보다

만델라 소년학교와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

---

### 한동훈과 만델라 소년학교

2022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하나의 지시를 내렸습니다. 서울 남부교도소 안에 소년 수형자들을 위한 학교를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 대한민국에서 소년수 전용 교도소는 경북 김천에 있는 소년교도소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형이 확정된 만 17세 이하 소년 수형자는 전국에 약 300명 정도였는데, 이 아이들 대부분은 학교를 다니다 말고 교도소에 들어온 경우였습니다. 수용 생활 동안 공부가 끊기면, 출소한 뒤에도 학력이 없다는 낙인이 따라붙고, 그 낙인이 다시 범죄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한동훈은 이 고리를 끊으려 했습니다.

2023년 3월,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 안에 만델라 소년학교가 정식 개소했습니다. 이름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에서 따왔습니다. 가난과 차별 속에서도 학업을 이어가 변호사가 되고, 끝내 대통령에 오른 사람. 그의 말이 이 학교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절대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데 있다."

만델라 소년학교는 국내 유일의 소년수 전담 교정교육기관으로, 형이 확정된 만 17세 이하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단순한 수형 생활이 아니라 검정고시와 대학 진학 준비 등 맞춤형 교육을 통해 사회 복귀 가능성을 키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파란 수형복을 입은 소년들이 칠판을 응시하며 필기구를 쥔 손을 움직이는 풍경은 여느 고등학교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교도관이 직접 영어를 가르치고, 대학생 봉사자가 국어와 수학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알파벳을 헛갈리던 아이들이 검정고시에 합격했고, 처음에는 피해자에 대한 반성문 쓰기조차 꺼리던 아이들이 교화 과정을 거치며 달라져 갔습니다.

2023년 11월, 사상 처음으로 교도소 안에 수능 시험장이 마련되었습니다. '서울 구로구 제13지구 제6시험장'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시험장에서,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10명의 소년수가 수능에 도전했습니다. 수능 응시 수수료는 전액 서울시교육청이 지원했습니다.

만델라 소년학교 교장을 맡은 사회복지과장은 "33년 9개월 근무하며 가장 보람찼던 적이 만델라 학교를 운영하며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였다"며 "아이들이 새벽 1시에도 자습을 하고 서로 영어단어를 묻고 답하는 모습을 볼 때였다"고 말했습니다.

2022년 10월 법무부 교정본부와 감사나눔연구원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만델라 소년학교에서는 감사 교육도 이루어졌습니다. 1기 교육에 참석했던 소년수 학생 6명이 2기 교육 때 강사진을 기억하고 먼저 인사를 건네왔고, 조별로 감사 구호를 만들고 칭찬과 격려로 친밀감을 쌓아가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바이올린 등 예체능 교육은 외부 전문가가 매주 방문해 지도하며, 모든 교육생이 반드시 참여합니다. 연 2회 피해자 공감 교육도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필요할 때는 심층 심리 상담도 진행됩니다.

비록 범죄를 저질렀지만, 아직 열일곱도 되지 않은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가두어놓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한동훈이 "강강약약"을 말할 때, "강한 자에게 강하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약한 자에게 약하게"라는 뒷부분이 만델라 소년학교에 담겨 있습니다. 재벌 총수의 불법에는 가차 없이 수사의 칼을 들이대면서도, 넘어진 소년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교실의 문을 열어주는 것. 이것이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남긴 두 가지 유산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소년수형자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사회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라며 "만델라 소년학교는 그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자, 국가 책임하의 청소년 교육"이라고 말했습니다.

16년째 동결된 수당, 침대 없는 당직실 — 한동훈,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보다

1 아무도 찾지 않는 곳

교도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정공무원. 이름부터 딱딱합니다. 하는 일은 더 딱딱합니다. 살인범, 성범죄자, 마약범, 조직폭력배를 매일 마주합니다. 새벽 교대근무를 하고, 수용자 난동을 몸으로 제압하고, 도주를 막고, 자해를 방지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키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재소자를 상대하는 교정공무원의 계호수당은 2006년부터 16년째 동결되어 있었습니다. 월 17만 원. 살인범 바로 옆에서 밤새 근무하는 대가로 하루 5천 원 남짓을 받는 셈입니다. 야근 근무자의 건강검진비는 3만 원이었습니다. 3만 원으로는 혈액검사 한 번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야간 당직실에는 침대가 없었습니다. 밤새 근무하다 잠깐 눈을 붙여야 하는 교정공무원이 딱딱한 바닥에서 쪽잠을 잤습니다. 관사에는 냉장고가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운동장에서 수용자 계호 근무를 하는 교정공무원이 한여름 폭염과 한겨울 한파에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몸을 피할 근무자실조차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한동훈은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동안 현장 교정 공직자의 열악한 처우가 심각하다고 말은 했지만, 정작 예산을 짤 때는 목소리 크고 힘 있는 직군에 밀려 한 번도 우선순위였던 적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늘 '다음에 하자'가 되었다."

'다음에 하자.' 이 네 글자가 16년 동안 반복된 것입니다. 법무부 안에서 교정공무원은 검사들 뒤에 숨어 있는 존재였습니다. 법무부 전체 직원의 약 절반이 교정직이지만, 예산을 따올 때 검찰 쪽이 먼저였고, 교정 쪽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 2 첫 번째 현장 방문지 — 교도소

2022년 6월 10일.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첫 정책 현장 방문지로 어디를 택했는지를 보면 그의 우선순위를 알 수 있습니다. 국회도, 대검찰청도, 서울의 어떤 번듯한 기관도 아니었습니다. 충북 청주교도소였습니다.

장관이 첫 방문으로 교도소를 찾은 것 자체가 이례적이었습니다. 교도소는 장관들이 일부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언론 카메라가 따라오지 않고, 화려한 성과 발표도 없고, 민원인이 환호하지도 않습니다. 높은 담장 안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간 것입니다.

한동훈은 현장에서 "교정 공무원 처우 개선은 공무원 복지가 아닌 수용자 인권을 보장하고 정교한 교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밑바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담긴 논리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정공무원의 처우가 열악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지치고 무력해진 교정공무원은 수용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합니다. 수용자 사이에 폭력이 번지고, 교정 질서가 무너지고, 교화 프로그램이 형식에 그치게 됩니다. 결국 사회로 돌아오는 출소자의 재범률이 높아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교정 공무원의 처우 개선은 곧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 3 약속, 그리고 이행

취임 100일이 되던 2022년 8월, 한동훈은 전국 교정공무원들에게 직접 메일을 보냈습니다. "교정 공무원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장관이 일선 교정공무원 개개인에게 메일을 보낸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은 숫자로 이행되었습니다.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교정공무원 처우개선 관련 예산을 종전보다 37.1% 증액해 반영했습니다. 총 186억 원 규모로, 전년 135억 원에서 50억 원 넘게 늘어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것이 얼마나 촘촘한 대책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특정 업무경비 지급 대상을 980명에서 1,430명으로 늘렸습니다. 종전에는 대상자의 66.9%에게만 지급되어 나머지 직원들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가 생겼는데, 이를 해소한 것입니다.

교정공무원 급식비를 10억 9,5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수용자 난동 제압 등 육체 활동이 빈번한 교정공무원의 특성을 고려해 군 장병 급식비 단가를 적용한 것입니다.

정신건강 회복 지원 예산은 6억 9,100만 원 늘어난 15억 3,8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매일 범죄자를 대면하는 교정공무원들의 심리적 소진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우울증, 번아웃에 시달리면서도 '강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정신건강을 돌볼 엄두를 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국가가 비로소 손을 내민 것입니다.

폭염과 한파에 노출되는 운동장 근무자를 위해 근무자실 151개소를 새로 설치하고, 1974년 준공된 홍성교도소 비상대기소 리모델링에 13억 8,800만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침대가 없던 야간 당직실에 침대를 설치하고, 모든 관사에 냉장고를 보급했습니다. 사동마다 교정공무원을 위한 프린터기와 인터넷을 설치하고, 격무지인 징별 사동 근무자들을 위한 근무수당을 추가 신설했습니다.

침대 하나, 냉장고 한 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조차 없었다는 사실이, 그리고 이것을 챙기는 데 법무부 장관의 직접 지시가 필요했다는 사실이 씁쓸합니다.

#### 4 38년 묵은 '예절 규정'을 찢다

한동훈이 바꾼 것은 예산만이 아닙니다. 교정 조직의 문화 자체를 건드렸습니다.

교정공무원들 사이에는 1985년에 만들어진 '교정공무원 예절 규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총 3장 17조로 구성된 이 규정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하 직원이 상사를 부를 때는 반드시 '님'자를 붙이고, 상사를 수행할 때는 상사의 왼쪽 또는 한 발짝 뒤에서 따르도록 명시했습니다. 악수는 상사가 요청할 때만, 상사의 한 발짝 앞에서 차렷 자세로 오른손을 내밀어야 했습니다.

38년 동안 유지된 규정입니다. 군대도 아닌 공무원 조직에서, 상사 뒤를 한 발짝 떨어져 걸어야 한다니. 한동훈은 이 규정의 내용을 알게 되자 즉각 폐지를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폐지 훈령에서 "상급자와 하급자의 상호존중 분위기 조성이라는 제정 취지와 다르게 '갑질의 정당화 논리'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존경을 강제해 경직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갑질의 정당화', '존경의 강제'라는 표현이 공식 훈령에 들어간 것 자체가 이례적이었습니다.

한동훈이 취임 때부터 실천한 탈권위 원칙이 교정 조직 구석구석까지 스며든 것입니다. 장·차관을 포함한 간부를 부를 때 '님'자를 쓰지 말라고 지시한 사람, 출퇴근 시 직원들이 관용차 문을 여닫는 의전을 금지한 사람이 내린 결정답습니다.

#### 5 전자감독 — 국민의 불안을 기술로 줄이다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과 함께 한동훈이 드라이브를 건 또 하나의 축이 전자감독 시스템 고도화입니다.

2022년 10월,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국민 불안이 극에 달했습니다. 한동훈은 서울 동대문구의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와 서울보호관찰소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전자발찌 시스템의 작동 상태를 점검하고, 고위험 감독 대상자에 대한 행동관찰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동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범죄자들은 어느 나라에나 있지만,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그 나라의 역량이자 국격입니다."

국격(國格). 나라의 품격이라는 뜻입니다. 범죄자가 존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범죄자가 출소한 뒤에도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 그것이 국가의 수준을 보여주는 척도라는 것입니다.

전자발찌의 성능을 높이고, 관제 시스템을 정교화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감독 대상자를 관리하는 신속수사팀의 인력을 보강하는 일이 뒤따랐습니다. 한국형 제시카법 추진과 맞물려,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를 빈틈없이 추적·감시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큰 그림의 일부였습니다.

#### 6 한 발짝 뒤에서 걸었던 사람들에게

2023년 3월 31일, 충북 진천의 법무연수원에서 제81기 7급 교정공무원 임용식이 열렸습니다. 교정직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처음 계급장을 다는 날. 이 자리에 한동훈이 나타났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교정공무원 임용식에 참석한 것은 진천본원 개원 이래 처음이었습니다.

한동훈은 수료생 한 명 한 명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고 악수를 했습니다. 한 명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38년간 '상사의 한 발짝 뒤에서 따르라'고 강제당했던 조직의 가장 아래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조직의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 먼저 손을 내민 것입니다.

교정공무원들 사이의 반응을 전한 법률신문의 보도가 인상적입니다. "전임 장관 시절과 비교해 상당한 변화가 이루어졌다." 교정공무원들이 주로 찾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한동훈이 약속을 지켰다며 법무부 정책을 환영하는 반응이 올라왔습니다.

16년간 동결된 수당을 올리고, 당직실에 침대를 놓고, 관사에 냉장고를 넣고, 폭염 속 운동장에 근무자실을 세우고, 38년 된 갑질 규정을 폐지하고, 전국 교정공무원에게 장관이 직접 메일을 쓰고, 임용식에 참석해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한 것. 어느 하나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창하지 않은 일이기에 더 마음이 쓰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당연히 있어야 했던 것들입니다. 침대가 있어야 잠을 자고, 냉장고가 있어야 음식을 보관하고, 건강검진을 받아야 아픈 곳을 찾습니다. 당연한 것이 없었다는 것, 그리고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해주는 데 장관의 결단이 필요했다는 것. 그 사실이 교정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얼마나 오랫동안 방치되었는지를 말해줍니다.

한동훈은 소년교도소에 수감된 아이들에게 영상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부보다 피해자들에게 미안해하고 반성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걸 늘 잊지 말아달라."

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에게 따뜻하게. 그 원칙은 재벌 총수를 구속할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도소 담장 안에서 묵묵히 일하는 교정공무원의 당직실에 침대 하나를 놓아주는 것에서도, 소년교도소의 아이에게 "반성이 먼저"라고 다독이는 영상 편지에서도, 똑같이 작동하는 원칙입니다.

## 나라의 구조를 고민하다

이민청 설립, 국제법무국 신설, 간첩죄 개정

---

한동훈, 이민청 설립과 대한민국의 구조를 고민하다

2022년 5월,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한동훈은 취임사에서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해 이민 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 나갈 체제를 갖춰 나가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취임 일성으로 이민 이야기가 나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보통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 검찰 개혁이나 법질서 확립을 먼저 말합니다. 그런데 한동훈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앞으로도 존속할 수 있느냐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가 본 숫자는 이랬습니다.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명.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였습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년 뒤 생산가능인구가 지금보다 1,000만 명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일할 사람이 1,000만 명이나 사라진다는 것은, 공장이 멈추고, 병원이 문을 닫고, 군대가 줄어들고, 연금이 바닥난다는 뜻입니다. 한동훈은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인구 감소는 출산율 회복 정책만으로는 이미 늦었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렇다고 아이를 더 낳으라는 정책을 포기하자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출산 장려는 계속하되, 그것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빈자리를 이민으로 메우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민정책 없는 선진국은 없습니다. 지금 시기를 놓치면 10년 뒤에 '왜 그때 하지 않았는지' 원망받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한동훈이 세계를 둘러본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호주는 "인구를 늘리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구호를 내걸고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캐나다는 150만 명 이상의 이민자를 수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온라인 이민지원 시스템을 도입해 영주권을 신속하게 내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조차 브루킹스연구소를 통해 "합리적 이민정책 개발은 국가를 건강 상태로 되돌리는 수단"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세계의 선진국들은 이미 이민을 국가 생존의 문제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만 뒷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이민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출입국은 법무부가, 외국인 노동자는 고용노동부가, 다문화 가정 지원은 여성가족부가, 사회 통합은 행정안전부가 각각 따로 맡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 환자를 다섯 명의 의사가 서로 상의하지 않고 각자 진료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가 이것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예산 배분 권한도 없고 실질적인 힘이 없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동훈은 이 구조를 바꾸려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이민청을 신설하고, 42개 법률에 흩어져 있는 출입국 업무를 이민청장 한 사람에게 모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민청이 출입국 및 체류 관리, 국적, 난민, 외국인 사회 통합 등 이민 관련 업무 전체를 맡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한동훈이 특히 강조한 것은 "유연한 이민의 전제는 엄정한 체류질서"라는 원칙이었습니다. 문을 열되, 아무에게나 열지는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은 반도체와 IT 강국인데 우수한 IT 인력이 안 들어오는 이유는 예측 가능성 때문"이라며 "유능하고 검증된 분들에게 대해서는 파격적으로 대우하겠다"고 했습니다. 고급 인력에게는 빠르게 문을 열어주고, 불법 체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질서를 잡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업이 추천하는 숙련 외국인 근로자에게 체류 자격을 파격적으로 전환해주는 제도도 약속했습니다.

한동훈은 전남도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전남은 2004년까지 인구 200만 명대를 유지했는데 지난해 181만 명까지 감소했다"며 지방 소멸의 위기를 직접 거론했습니다. 무안공항 무사증 제도, 조선업 외국인 인력 확보,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등 지역 맞춤형 정책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전남도지사는 "체계적 외국인 정책을 위해 이민청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화답했습니다.

한동훈은 이민정책을 농지개혁에 버금가는 국가적 중대 사안으로 보았습니다. 1950년대 농지개혁이 대한민국의 경제적 기초를 놓았듯이, 이민개혁이 인구 절벽 시대에 나라의 미래를 지탱하는 기둥이 될 것이라는 구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이민청 설립은 사실 민주당이 4년 전 총선 공약으로 내놓았던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자 민주당은 반대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누가 하느냐에 따라 같은 정책이 좋은 정책이 되기도 하고 나쁜 정책이 되기도 하는 여의도의 풍경이었습니다.

2024년 2월, 이민청 신설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법무부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의 조율을 거친 법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도 소극적이었고, 거대 야당인 민주당도 무관심했습니다. 한동훈이 법무부를 떠나 정치에 입문한 뒤,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이민청 법안은 국회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채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한 언론의 기고문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부처 칸막이와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서 한동훈이라는 개인 역량에만 의지한 이민개혁은 예견된 한계이기도 했다. 아무도 책임질 사람도 없고 수습할 부처도 없다. 이대로 막을 내리게 되면 또다시 잃어버린 5년을 추가하게 되고, 그 부담은 미래 세대에게 전가될 뿐이다."

한동훈이 이민청을 추진한 것은 단순히 외국인을 더 많이 들여오자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구조 자체를 고민한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나라에서, 일할 사람이 사라지는 나라에서, 지방이 텅 비어가는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는가.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이 던진 이 질문은 법무 행정의 범위를 넘어 국가 설계의 영역에 닿아 있었습니다.

이민청은 아직 설립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경상북도, 충청남북도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민청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은, 한동훈이 던진 화두가 여전히 살아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구 절벽이라는 시한폭탄 앞에서, 누군가는 반드시 이 문제를 다시 꺼내 들어야 합니다. 한동훈은 그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한동훈이 바꾼 간첩죄 — 73년 만의 개정, 그 전말

1 낱은 법의 구멍

대한민국 형법 제98조는 195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전쟁 직후였습니다. 조문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만을 가리킵니다. 70여 년 전 북한만이 위협이던 시절에 쓰인 법입니다.

문제는 세상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반도체 설계도를 중국 기업에 넘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러시아를 위해 군사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항공모함을 몰래 촬영해 외국 SNS에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법에 적혀 있는 '적국'이 북한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법으로 처벌할 길이 아예 없지는 않았습니다. 군사기밀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국가공무원법 등을 끌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업기술보호법의 법정형은 15년 이하 징역으로, 사형까지 가능한 간첩죄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낮았습니다. 국가의 가장 은밀한 비밀을 외국에 팔아넘긴 사람을 '간첩'이 아니라 단순 기밀유출범 정도로 다루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2 간첩인데 간첩죄를 쓸 수 없다 — 정보사 기밀유출 사건

이 법의 구멍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 있습니다.

2024년 7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가 해외에서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요원'들의 실명과 신상, 위장 기업 정보 등 2·3급 군사기밀을 중국 정보요원에게 넘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씨는 2017년 중국 연길 공항에서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에게 포섭된 뒤 7년간 기밀을 빼돌리고, 대가로 약 1억 6천만 원을 차명계좌로 받았습니다.

누가 봐도 간첩 행위입니다. 그런데 군 검찰은 A씨에게 간첩죄가 아닌 일반이적죄를 적용했습니다. 유출된 기밀정보가 '적국'인 북한이 아닌 중국의 정보기관으로 흘러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해 부산 해군기지에 정박한 미국 항공모함과 수원 공군기지 등을 중국인 유학생이 무단 촬영해 중국 SNS에 유출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이 역시 간첩죄로 다스릴 수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북한에 군사기밀을 넘기면 간첩. 중국에 넘기면 간첩이 아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 3 한동훈, 가장 먼저 목소리를 높이다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정치인 가운데 간첩죄 확대 문제를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이슈화하고 공론화한 사람은 한동훈입니다.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이 문제를 꺼냈습니다. 법무부 장관 재임 중에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시절에도 법 개정에 강한 의지를 보였고,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면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4년 7월 당대표로 선출된 뒤에는 간첩법 개정을 아예 당론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정보사 기밀유출 사건이 터지자 한동훈은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다.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을 못 한다. 우리나라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8월에는 국회에서 열린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서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 간첩죄에 있어 적국을 외국으로 바꿔야 한다."

한동훈의 주장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간첩은 북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 러시아, 어느 나라든 우리 국가기밀을 노리는 스파이가 있다면 간첩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둘째, 다른 나라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을 확대 적용하고 있고, 영국은 2023년 국가안보법을 도입했으며, 중국도 2023년 간첩법을 개정해 처벌 범위를 넓혔습니다. 셋째, 이것은 단순한 형벌 강화가 아니라 국익과 국민의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한동훈은 "형벌 규정의 확대 문제가 아니라 국익과 국민의 문제, 그리고 세계질서 속 우리의 위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철학의 문제"라고 규정했습니다.

### 4 여야 공방과 길고 긴 입법 과정

한동훈의 주장에 야당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간첩죄를 넓혀야 한다는 큰 방향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이견이 크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에서도 장경태, 강유정, 박선원, 위성락 의원 등이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세부 쟁점에서 의견이 갈렸습니다.

반대 측의 우려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법에서 말하는 '국가기밀'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판례가 "사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누설될 경우 외국에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명백하다면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어서, 외국인과 교류하는 일반 국민까지 간첩 혐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였습니다. 둘째, 국정원의 국내 사찰 범위가 다시 넓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었습니다.

입법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11월 13일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법사위 전체회의에 나오지 않아 처리가 미루어졌습니다. 이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면서 모든 입법 논의가 멈추었습니다.

2025년 11월 법무부 장관 정성호가 개정 의사를 재차 밝히면서 논의가 재개되었고, 2025년 12월 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간첩죄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간첩죄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오른 것 자체가 헌정사상 처음이었습니다.

#### 5 73년 만의 개정 — 2026년 2월 26일

2026년 2월 26일, 간첩죄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3년 만의 첫 손질이었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는 재석 170명 중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같은 법안에 묶인 법왜곡죄에 반대하며 표결 자체에 불참했습니다.

개정된 내용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기존의 '적국을 위하여 간첩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한다는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신설된 조항은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외국 등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는 종전과 같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형량에 차이를 두어 '적국'과 '외국'을 구분하되, 외국을 위한 기밀 유출도 간첩죄라는 무거운 이름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북한뿐 아니라 어떤 외국을 위해 국가기밀이나 첨단기술을 유출한 경우에도 간첩죄가 적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국 기업이나 해외 연구조직과 연계된 산업 스파이 행위 역시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6 한동훈이 이 문제에서 갖는 의미

간첩죄 개정은 한동훈 혼자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야 의원들이 수십 건의 개정안을 발의했고, 법무부와 국정원이 논의를 거듭했으며, 국민청원에 5만 명 이상이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공론의 장 한가운데로 끌어낸 사람은 한동훈입니다. 법무부 장관 시절 처음 개정을 추진했고, 비대위원장 시절 재차 강조했고, 당대표가 되어 당론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정보사 기밀유출이라는 충격적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장 빠르게 짚어낸 사람이기도 합니다.

법무부 장관에서 당대표까지, 직책이 바뀔 때마다 한 번도 이 주제를 내려놓지 않았습다. 검사 출신 정치인이 법의 빈틈을 발견하고, 그 빈틈을 메우기 위해 정치적 자원을 투입한 사례입니다.

개정된 법은 공포 절차를 거쳐 6개월 뒤 시행됩니다. 73년 된 낡은 울타리가 비로소 새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 한동훈과 국제법무국 신설 — 나라 공간을 지키는 조직을 만들다

### 1 왜 이 조직이 필요했는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외국 투자자가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있습니다. 이것을 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외국 기업이 "한국 정부 때문에 투자금을 손해 봤다"며 국제 중재기관에 소송을 거는 것입니다.

2023년 7월 기준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는 총 10건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이 룬스타(약 6조 원 규모)와 엘리엇(약 7700억 원 규모)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국제 소송에 대응할 전담 조직이 법무부 안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소송이 걸릴 때마다 외국 로펌에 사건을 맡기고,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가 반복되었습니다. 한동훈은 이 구조의 문제를 정확히 짚었습니다. "ISDS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는 국내에서 대응할 역량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외국 로펌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는 이 문제를 더 직설적인 비유로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중재 관련 로펌이나 비즈니스가 굉장히 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문제 제기가 많다. 사실상 당구를 오래 치면 당구장 주인만 돈을 버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소송에서 이기든 지든, 외국 로펌에 흘러가는 수입료만 수백억 원입니다. 한동훈은 이것을 구조적으로 바꾸겠다고 결심했습니다.

## 2 국제법무국, 무엇을 하는 조직인가

2023년 7월 26일,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국제법무국 신설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국제법무국 산하에는 3개 과가 설치되었습니다.

첫째, 국제법무정책과입니다. 법률시장 개방, 조약 등 국제협정 체결 협상 참가 및 관련 법률자문 업무를 맡습니다. 외국과 새로운 투자 협정을 맺을 때, 나중에 분쟁의 빌미가 될 조항은 없는지 미리 살피는 일입니다.

둘째, 국제법무지원과입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등 중앙행정기관의 민사·상사 분야 검토 업무와 ISDS 예방에 관한 사안을 담당합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 그것이 외국 투자자의 ISDS 제기 빌미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법적으로 점검하는 역할입니다.

셋째, 국제투자분쟁과입니다. ISDS 대응과 실무 운영 사안을 총괄합니다. 이미 제기된 소송에 직접 대응하는 실전 부대입니다.

국제법무국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이 맡고, 총 8명의 인력이 배치되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작은 조직입니다. 그러나 이 8명이 수조 원 규모의 국제 소송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합니다.

한동훈은 이 조직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ISDS 경험을 축적하면 우리도 충분히 대응하면서도 국익을 증진하고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 외국 로펌에만 의존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스스로 국제 분쟁을 다루는 역량을 키우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 3 신설의 배경 — 론스타와 엘리엇

국제법무국이 만들어진 시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 7월입니다.

불과 열흘 전인 2023년 7월 18일, 한동훈은 엘리엇 ISDS 판정에 대한 후속 조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엘리엇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소송이었습니다. 론스타 ISDS는 이미 2022년 8월 중재판정부가 약 3000억 원 규모의 배상을 명한 상태였고, 한동훈은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한 직후였습니다.

법무부는 국제법무국을 만들면서 "론스타·엘리엇 ISDS 선고 등 주요 사건들이 연이어 쟁점화됐다"며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건의 ISDS 금액을 합치면 7조 원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이 돈은 국민의 세금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한동훈은 이 소송들을 직접 지휘하면서, 소송 한 건 한 건에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분쟁이 터진 뒤에 허둥지둥 외국 로펌을 고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평상시부터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이 생기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상설 조직이 필요했습니다.

### 4 국제법무국의 첫 번째 전과 — 론스타 승소

국제법무국이 만들어진 뒤 초대 국장으로 부임한 인물이 정홍식 국장입니다. 국제법·국제중재 전문가였습니다.

한동훈은 2023년 12월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했습니다. 그가 떠난 뒤에도 국제법무국은 계속 작동했습니다. 론스타 ISDS 취소 소송의 마지막 변론 기일까지 정홍식 국장이 이끄는 국제법무국이 총괄했습니다.

2025년 11월 18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론스타에 대한 약 3000억 원 규모의 배상 판정 전부를 취소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승소 소식을 전하면서 "실력 있는 국제법·국제중재 전문가"라며 "정홍식 국장의 노고가 굉장히 컸다"고 인정했습니다.

한동훈이 만든 조직에서, 한동훈이 발탁한 전문가가, 한동훈이 제기한 소송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장관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조직은 살아 움직였습니다.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국익을 지키겠다는 한동훈의 구상이 현실에서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 5 한 사람의 결단이 만든 시스템

국제법무국 신설은 화려한 사건이 아닙니다. 8명짜리 조직을 만든 행정적 결정에 불과합니다.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작은 조직이 지켜낸 돈은 수조 원에 달합니다. 론스타 ISDS에서만 이자를 포함해 약 4000억 원의 배상 결정이 전부 취소되었고, 앞서 엘리엇 ISDS에서도 정부의 방어 논리가 상당 부분 받아들여졌습니다. 2026년 3월 확정된 신들러 ISDS 완전 승소(약 3200억 원 청구 기각)까지 더하면, 국제법무국이 관여한 사건들의 총액은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큼니다.

한동훈은 검사 시절 론스타의 주가조작을 직접 수사해 유죄를 이끌어낸 사람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는 그 형사판결을 ISDS 방어 논리의 핵심 무기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자신이 떠난 뒤에도 이 싸움이 계속될 수 있도록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수사하고, 기소하고, 유죄를 받아내고, 그 판결을 국제 소송의 방패로 전환하고, 그 방패를 영구히 들고 있을 조직까지 세운 것입니다. 하나의 사건이 20년에 걸쳐 하나의 서사를 이루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론스타 사건에서 한동훈의 역할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 한동훈이 대한민국에 남긴 그간의 흔적

이 책을 잘 읽으셨으면 그리고 새로운 가치있는 지식을 얻으셨다고 판단되시면  
농협 302-1096-0948-81 (예금주 김경진) 에 자발적 후원 부탁드립니다.